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일시 2010. 5. 13(목) 14:00

장소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일시 2010. 5. 13(목) 14:00

장소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프로그램



- ▶ 일 시: 2010. 5. 13(목) 14:00
- ▶ 장 소: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시 간	진 행 순 서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4:10-14:40	주제발표 :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 론 좌장 전혜정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14:40-15:40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강복정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팀장 김선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정착지원센터 부장 전우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장 전연진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장
15:40-16: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목 차



* 주제발표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1
------------------------	---

장명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토 론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65
---------------------	----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69
-------------------	----

강복정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팀장	75
---------------------	----

김선희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정착지원센터 부장	81
----------------------------	----

전우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장	91
----------------------	----

전연진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장	97
-------------------	----

[주제발표]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발 표 :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주제 발표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I. 서 론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빈곤의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서비스의 차이가 크다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시켜 왔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비용 지원 외에도 보육지원 및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조기에 교육·보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미흡한 편이다.

최근 사회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농어촌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취학전 영유아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한 유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 정책은 성인을 중심으로 취업이나 경제적인 측면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학업이나 학교 적응 문제를 비롯하여 청소년에 대한 연구나 지원사업도 증가하고 있으나 역시 영유아 양육 지원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때, 저소득층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를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간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법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취약계층 가정 지원 정책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육아의 어려움과 실태 및 요구를 고려한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2009년도부터 3개년 연구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의 2009년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부처 사업들간의 연계·협력 방안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Ⅱ.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지원정책 사업 현황

1. 저소득층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표 Ⅱ-1-1> 정부 부처별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구분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사업
담당 부처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서비스 대상자	0~12세	유아~18세	취학전 유아(발달지연아)
서비스 내용	건강, 보육,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교육, 복지, 건강서비스 지원	기관 이용 및 미이용 유아 대상 발달지원 프로그램 제공
공급기관	드림스타트 센터 및 관련 수행기관	시·도 교육청 및 유치원(보육시설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단설공립 유치원에 주로 배치)
센터/지역/ 인력 수	100개 (2010년 기준)	100지역 879교 (2009년 기준)	희망유아교육사 약 200여명 (2009년 기준)

드림스타트 사업은 각 센터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주로 영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각 센터의 담당 보육조정자 혹은 보육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실시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영유아나 부모대상의 활동집이나 프로그램, 매뉴얼이 별도로 발간된 것이 없었으

나 최근 저소득 가정의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후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서는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단위 사업으로 각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별로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이나 문화체험, 특기적성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유아교육복지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 유아교육 분야의 사업 발굴,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교육청에 따라 공동사업 형태로 인지, 언어, 정서 등의 활동에 대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시하거나 변형하여 실시하고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체 프로그램은 없으나 지역사회의 대학과 연계하여 집단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유아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투사업에서는 중앙에서 개발된 고유의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유아교육복지 전문가들 또는 시도별 프로젝트조정자들이 영유아 및 부모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희망유아교육사업)에서는 발달지연 유아와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교사가 학급에서 대소집단 형태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를 개별유아에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1:1 지도 활동 형태로 변형을 해야 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가정에서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부모역할 지원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집단용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중산층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영역발달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가정환경 및 부모를 좀더 세밀하게 고려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주제로 구성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국내 취약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살펴보면 영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용 프로그램, 유아 대상의 개별 지도 프로그램, 특히 취약계층 가정을 고려한 부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검사지도 개발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의 많은 인력들은 지도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소에서는 2009년도에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기관용),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개별용 또는 가정지도용), 부모교육용(개별용, 집단용,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형 또는 수정하여 시범사업에 적용하였다.

2.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현황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2004년 말 ‘여성결혼이주자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및 차별개선 추진이 대통령 지시과제로 지시(2005. 5. 22)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 제74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때 12개 관련부처가 총 7개 과제, 27개 소과제를 분담시행하게 되었고,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총괄 수행하였으며, 과제 목록은 <표 II-2-1>과 같다.

<표 II-2-1> 결혼이민자가족 사회 통합 지원 대책

영역	과제
탈법적인 결혼증개방지 및 당사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제정-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안정적인 체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관리 강화- 혼인파탄 입증책임 및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전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다문화 교육 실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 정보 활용 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자녀지원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영역	과제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 후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기초생활 보장,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부분 취업 지원 - 무료 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 진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체계구축 및 분위기 조성 - 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단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상담 강사 통역 인력 양성 - 업무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

현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기술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로서 [그림 II-2-1]과 같이 부처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정책 총괄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외국인노동자 정책	자녀의 학교 교육 및 부모 지원	다문화성 제고 한국어교재개발

[그림 II-2-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부부처별 소관 업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중 영유아 지원과 좀더 관련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가족부 사업¹⁾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현재 가족 업무와 함께 다문화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에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수행중에 있다. 생애주기는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 강화기, 가족해체시로 나누어져 있고, 각 주기별에 따라 목표 및 방향은 [그림 II-2-2],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는 [그림 II-2-3]과 같다.

1) 2010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

비전: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국민의 다문화 사회 이해 증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전체 대상 포괄적 정책 추진 -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관 협력의 효율적 사업 추진
------	---

[그림 II-2-2]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 목표 및 방향



[그림 II-2-3]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또한 2006년 4월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21개소 설치·운영하였으며, 이는 2008년 말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으로 관리기관이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는 전국 시·군·구에 여성가족부 위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여 개소로 증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센터사업은 기본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업 이해 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이 있고, 기타 사업으로는 통번역 자조모임, 다문화가족자원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홍보 및 정보제공, 종사자 역량강화 등이 있다.

나.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부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 및 학교 교육청 중심의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복지대책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다문화 교육기반 구축,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의 4가지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표 II-2-2>와 같다.

<표 II-2-2>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사업

추진과제	주요내용	추진일정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2008~2011
	취학후 한국어 등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2009~2012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2009~2012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가족단위 한국어 정보화 교육 강화 - 다문화가정 가족단위 한국어 교육 등 지원 -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정보화 교육지원	2008~2012
	다문화가정 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 책자 발간 · 보급	2009~2010
	다문화가족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2009~2012
	자원봉사 통역도우미 운영	2010~2012
다문화 교육 기반 구축	지도교사 및 관리직 교원연수 강화	2008~2010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운영	2009~2012

추진과제	주요내용	추진일정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교대 등에 다문화교육강좌 개설 지원	2009~2010
	다문화요소를 반영한 교과서 집필 및 교육자료 개발	2010~2012
다문화 이해제고 및 확산	학교 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에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출신국 언어학습 지원 - 다문화 교육 우수학교 발굴 및 지원	2009~2012
	다문화 이해 촉진을 위한 영상물 제작보급	2009~2012
	다문화교육 체험공모전 실시	2009~201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대책.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한편, 2009년에는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 위탁하여 초등학교 이중언어 강사 배출 프로그램을 통해 70개 초등학교에 강사를 배출하였다. 강사는 대졸이상의 학력조건에 부합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총 900시간의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교육 및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이해수업을 병행하였다. 이는 올해 유아 및 유치원 대상의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배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사업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교육복지정책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지원방안(’10. 3)’의 주요 정책으로 ①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②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완·개발, ③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 실시, ④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 현장 활용 확대, ⑤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가정 지원사업 현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돋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부처는 통일부이지만,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대한적십자사,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이들에 관련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지원 분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관련된 지원인 주거 및

정착 지원을 비롯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교육, 사회보장 및 의료, 신변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표 II-3-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요내용

구분	항목	내용	담당기관
주거 및 정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600만원 지급	행정안전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장애1급)의 가산금 지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지원금 지원	
	거주지보호담당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지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및 각종 행정지원업무 담당(전국 211명)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1세대 당 2명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생활지원(전국 1,600명)	
직업 훈련 및 취업	직업훈련	거주지 보호기간(5년)동안 총 3회의 직업훈련을 무료로 수강하며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노동부 취업담당부서
	정착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2,140만원의 장려금 지원	
	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급여의 1/2를 24개월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0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알선 역할 담당	
교육	대학특례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입학	교육과학 기술부
	등록금 지원	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사회 보장 및 의료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지원(1인 세대 월 약 38만원)	보건복지 가족부 사회복지 담당부서
	의료급여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지원(1인 세대 월 약 38만원)	
신변 보호	신변보호 담당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약 700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 외부의 신변보호를 위해 관련 상담 역할 담당	경찰청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8). 새터민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탈주민 독립정착지원 기관으로서 하나원이 있다. 하나원은 1999년 7월 경기도 안성에 개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사회적응교육을 비롯하여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돋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 10주년을 맞이하였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처음에 입국해서 거주지가 확정되기 전까지(8주 교육기간이 2010년 3월부터 12주로 연장) 낯선 남한 사회에 바로 편입되기 전에 그 차이를 줄여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훈련·교육 기관이다. 이 곳에서의 교육내용은 사회적응에 관한 것과 직업교육 등인데, 교육생의 생활일과표를 살펴보면, 하나원 시설 내에서 규칙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공식 여가프로그램으로는 영화감상과 음악공연이 있고, 그 외에도 진학자나 취업자 대상의 프로그램,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선배 북한이탈주민들의 특강과 대담, 기타 종교행사 등이 있다(김정인, 2003). 외부에 개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 부처 사업추진 기관이나 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거나 자원봉사단체나 종교 단체 등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15,000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유관부처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역량의 체계화 필요와 ‘하나원’ 이후의 거주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하나센터사업을 2008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5개 지역인, 서울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2010년 전국으로 확대 설치 예정),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센터는 거주지에서 초기 적응 및 취업·진로지도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나원에서 정착지역으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3주 간의 초기집중교육과 1년 간의 밀착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된 정착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1) 전입초기 지역사회 이해교육 2) 지역주민 교류 및 적응력 향상 3) 취업지원, 진로·진학상담 등 자립·자활기반 조성 4) 의료연계 및 심리상담 5) 가족문제, 법률문제 등 개인적인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이 있다.

III.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요구 분석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취약계층 가정 및 유아의 특성

가. 일반 저소득층 가정

선행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불안정한 취업, 열악한 주거환경, 가족관계, 양육태도 및 행동 등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해영, 1994; 나정·문무경·심은희, 2004; 노인철, 1995; 이소희·유미숙, 2000; Crnic & Greenberg, 1987). 이러한 가정환경과 부모 요인은 영유아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경우, 건강 상태가 불량해지기 쉽고(나정 외, 2004),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며(민경화, 2000; 허인영, 1999),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경향(이지혜, 2003; 정문자·어주경, 1999)을 나타내었다. 일반 가정 영유아에 비해 지적능력과 언어능력 발달 수준이 다소 낮았으며, 이러한 발달결과는 이후의 학업성취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이선영, 2000; 이재연, 1993; Cazen, 1968). 또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여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에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특성을 보인다(김향숙, 2001).

1)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정의 특성을 부 또는 모, 자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은영, 2009).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충격 및 가장으로서의 역할 부담, 직장생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된다.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사일의 부담감이 있다. 둘째, 자녀양육의 부담감이 있다. 셋째, 사회로 부터의 차별적인 시선이다. 한부모가정은 한쪽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전치 못한 가족,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사회에서 낙인과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불안정 문제이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해 안정감결여, 정서적 긴장, 역할혼란의 시기를 맞게 된다. 두 번째로 사회적응문제이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숨기려 하는 아동들은 교우관계 및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치 못하게 된다.

2) 조손가정

조손 가정은 부부의 사별,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조부모는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형성된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조손가구는 총 58,101가구로 전체 가구의 0.36%에 불과하나, 1995년 35,194가구, 2000년 45,224가구로 10년 동안 65.1%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손가정의 증가는 가족해체 산물이라는 점과 노년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늘어난다는 점,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 준비 없이 여러 가지 가족 문제를 떠맡고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여성가족부, 2007).

조손 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가족해체 전과 후의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손자녀의 행동과 정서의 부적응을 대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나 손자녀들은 조부모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며 항상 있어주기를 바라고(김혜선,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 2007년 여성 가족부는 조손가정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가사 부담이 어려운 점의 하나로 밝혀졌고, 손자녀 양육 이후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령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어려워하는 점으로 지적한 양육비와 양육에 따른 노동의 증가, 그리고 자신이 양육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조손가정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라는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07)고 지적하고 있다.

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모 양쪽이 각기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기 때문에 공통된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는 가족 간의 대화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요소

가 된다(충남발전연구원, 2008).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녀양육 및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정체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충남발전연구원, 2008).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영달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결혼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다문화가정은 저소득 가구이지만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가족 외의 혈연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정의 유아에 대해서는 가정과 기관에서 정체성의 혼란 및 부적응을 지적하였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간의 성장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특히 어머니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녀들의 생활이나 학습에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서혁, 2006).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기관적응을 조사한 몇몇 연구들(김희태 · 권영덕, 2007; 박미경, 2006)에 의하면 기관에서 또래들과 잘 지내지 못해 혼자놀이를 하거나 교실 안을 배회하거나 언어적 표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들과 일반가정 유아들간의 발달상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87.5%)고 보고한 연구(문무경 · 조혜주, 2008)와 교사들에게 다문화가정 유아의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의 영역 발달을 체크리스크로 살펴본 연구(이현경 · 서현 · 김동례, 2009)에 의하면 일반가정 유아들과 비교적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는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적응수준이 아주 낮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심각한 언어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말하기, 듣기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읽기와 쓰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학업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영달 외, 2006).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으며(류현주 외, 2008),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한국 표준 집단에 비해 사실에 대한 지식 습득도 영역에 있어 낮은 인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구효진 · 최진선, 2007).

사회정서적인 발달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상태를 조사한 전혜정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아동에 비해 분노-공격적 행동특성과 불안-위축행동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보다 어린 같은 반 학생보다 부진한 성적으로 인

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타인에게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나 주변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놀림, 구타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이로 인해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조영달, 2006).

다. 북한이탈주민가정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탈북 가정의 특성으로는 복잡한 가족관계, 가부장적 부모-영유아관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비속련화, 사회적 지지의 부재, 심리적 어려움, 교육에 대한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체류기간 동안 동거를 하거나 남한 입국 후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추후로 데려오는 경우, 한국에서 새로 가정을 꾸렸다가 나중에 남아있는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 등으로 인해 복잡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탈북이후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족갈등, 가족해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장혜경, 2008). 또한 가족 규범적 특성으로서 부부관계 및 부모-영유아관계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가부장적이며, 수직적인 가족관계를 보인다. 특히 남편(아버지)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때로는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부모의 권위 상실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최명선·최태산·강지희, 2006).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도 큰데, 남한 교육기관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의 문제로 인해 영유아와의 갈등, 부모와 영유아 간의 남한 사회 적응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겪기도 한다(안연진, 2002; 홍주은, 2003).

또한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배운 지식 등이 남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적 열등감 및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언어적 혼란과 문화적 괴리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김영미, 2002). 이 외에도 대인관계 및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한 사회에서 새로이 인간관계를 쌓아야 하는 부담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사회·정서적 지지의 부재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김영미, 2002; 전익수, 2001).

가족을 남겨놓고 탈북을 한 경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조사 결과,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딸 1명(1.10), 아들 1명(1.16)이고, 자녀의 평균연령은 10.8~11.5세로 밝혀졌다.

자녀와의 동반입국은 31.2%(39명), 자녀가 먼저 입국한 경우는 13.6%(17명), 중국이나 북한에 자녀가 분리되어져 있는 경우는 55.2%(69명)로,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중국이나 북한에 있어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최대현·최태산·강지희, 2007). 이 경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탈북 부모들도 자녀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탈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조천현, 2002). 그러나보니 자신의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의욕은 현실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이어져 양육스트레스가 높다(최대현 외, 2007). 남한 사회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경험의 부재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가지며,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양육경험이 많지 않아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탈북 가정 아동의 특성은 크게 신체적 측면, 심리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체적 측면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기아와 신체 상해, 발육과 성장상태, 영양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아동이 많다(김영미, 2002). 발육이 또래 남한 아동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눈에 잘 띄기도 하며, 이러한 신체 조건들로 인하여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한다.

둘째, 심리 정서적 측면으로는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극단적 경험으로 인하여 긴장을 유발하는 기제가 발달하게 되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조숙한 경우가 많다(김영미, 2002). 또한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외감과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외로움·불안감이 크며(김영미, 2002; 정병호, 2001; 조소연, 2001), 심하면 우울증, 대인기피 등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PTSD)나 정체감의 혼란 등이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전익수, 2001).

셋째, 인지적 측면으로는 학습 결손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 및 좌절감이 크다. 특히, 언어 습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2~3세에 탈북을 한 경우에는 언어발달이 늦고, 4세가 되도록 언어를 익히지 못하는 등 언어발달의 유예기를 겪기도 한다(이부미, 2003).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학업에서 일부과목을 제외하고는 학습 진도를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습과 관련해서 부모들의 교육방식에서 발생하는 부모들의 당혹감이나 상대적 빈곤감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박모란, 2002).

넷째, 사회적 측면으로는 상반되는 사회체제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혼란, 언어적 혼

란과 문화적 괴리감 등을 경험하면서,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최명선, 2006).

2.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가족유형별 육아실태 및 요구²⁾

가. 저소득층가정 육아 실태 및 요구

1) 일반적 특성

본 조사(2009년도 7~8월 실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희망유아교육사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각 사업 센터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여 사업 대상가정 부모 명단을 확보하여 동의를 구한 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정부의 상기 세 가지 사업이 모두 투입·실시되고 있는 지역 및 취학전 영유아 프로그램 전문가³⁾가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조사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저소득 밀집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저소득층 가정 조사대상

구분	대상자	대상수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	209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	39명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	211명
일반저소득 ⁴⁾	저소득 가정 (수급자/차상위) 영유아 부모	210명

- 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장명림 외, 2009)’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3) 영유아 프로그램 전문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영유아 기본 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 드림스타트 사업의 ‘보육교사’를 말함.

조사대상 영유아의 부모의 연령은 30~39세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61.1%, 68.8%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7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세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85.3%, 어머니의 25.6%가 취업 중이었고, 취업중인 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아버지의 57.2%가 정규직/상용직이며, 41.4%가 비정규이며, 어머니의 경우 정규직/상용직은 26%, 비정규직 임시직이 37.9%, 일용직이 35.5%로 나타났다.

<표 III-2-2>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연령		
19세 이하	0.2 (1)	0.3 (2)
20~29세	7.0 (36)	15.0 (93)
30~39세	61.1 (313)	68.8 (428)
40~49세	29.5 (151)	15.6 (97)
50~59세	2.0 (10)	0.3 (2)
60~69세	0.2 (1)	0.0 (0)
취업여부		
그렇다	85.3 (466)	25.6 (169)
아니다	14.7 (80)	74.4 (490)
종사상 지위		
정규직/상용직	57.5 (268)	26.0 (44)
비정규직중 임시직	19.1 (89)	37.9 (64)
비정규직중 일용직	22.3 (104)	35.5 (60)
자영업	1.1 (5)	0.6 (1)

또한 본 조사대상 가구의 가족유형을 알아본 결과, 부부와 영유아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75.4%이고, 한부모와 영유아로 이루어진 가정이 22.7%, 조부모와 손영유아로만 이루어진 가정이 1.9%였다. 이는 친인척과 영유아로 이루어진 가정 등 기타 가족유형은 제외한 비율이다(<표 III-2-3> 참조).

4) 일반저소득 가정은 정부 지원 사업 가정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포함한 것임.

<표 III-2-3> 가족유형 및 소득계층

구분	비율(수)	계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5.4 (476)	
한부모가정	22.7 (143)	100.0(631)
조손가정	1.9 (12)	
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층	31.3 (170)	
차상위층	55.8 (303)	100.0(543)
3층 이상	12.9 (70)	

조사대상 가정의 영유아의 연령을 보면, 만5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2세, 만4세 순으로 많았다. 또한 성별은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2-4> 영유아 특성

구분	비율(명)	계(명)
연령		
0세	8.2 (55)	
1세	10.9 (73)	
2세	16.3 (109)	
3세	12.7 (85)	100.0(669)
4세	15.5 (104)	
5세	21.1 (141)	
6세	15.2 (102)	
성별		
남자	52.3 (350)	100.0(669)
여자	47.7 (113)	

2) 영유아자녀 관리 및 지도

조사대상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 부모가 영유아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III-2-5> 참조).

가족유형에 따른 영유아 지도·관리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균형 있는 식사 제공, 인스턴트 음식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TV 또는 비디오 시청시간 제한, 정해진 취침시간 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양부모가정의 부모가 한부모가정의 부모보다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양육자보다 제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또는 비디오 시청시간을 제한하는 정도는 양부모가정의 부모가 가장 높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취침시간 또한 양부모가정 부모가 한부모가정 부모에 비해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일상생활 중 영유아 지도 및 관리

구분	집안정결 유지	균형 있는 식사제공	신체정결 유지	기본생활습관지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TV 또는 비디오 시청시간제한	정해진 취침시간 지도	단위: 점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3.8(0.8)	3.7(0.8)	4.1(0.7)	3.9(0.8)	3.6(1.0)	3.5(1.0)	3.8(0.9)
가족유형별								
양부모	3.9(0.7)	3.7(0.8) _a	4.1(0.7)	4.0(0.8)	3.7(0.9) _a	3.7(1.0) _a	3.9(0.9) _a	
한부모	3.8(0.8)	3.4(0.9) _b	4.1(0.7)	3.8(0.7)	3.4(1.0) _b	3.4(1.0) _b	3.6(0.1) _b	
조손	3.3(3.3)	3.3(0.8)	3.9(0.8)	3.6(0.8)	2.8(1.4) _b	2.3(1.2) _c	3.7(0.3)	
F	3.61*	10.48***	0.69	2.61	8.24***	14.77***	4.44*	

주: a, b, c 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 < .05. ***p < .001.

영유아에게 일주일간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수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에게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86.2%로 가장 높았다(<표 III-2-6> 참조). 가족유형에 따른 규칙적인 식사 제공 횟수를 살펴보면,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모두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으나, 불규칙하게 제공한다는 응답은 조손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6> 영유아에게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수

단위: %(명)

구분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3일 이상 규칙적으로	2일 이상 규칙적으로	일주일 내내 불규칙하게	계(명)	$\chi^2(df)$
전체	86.2	11.2	1.0	1.5	100.0(669)	
가족유형별						
양부모	88.9	9.5	0.8	0.8	100.0(476)	
한부모	75.5	19.6	1.4	3.5	100.0(143)	20.91(6)
조손	83.3	8.3	-	8.3	100.0(12)	

평소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해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족유형에 따라 영유아와 함께 책 읽는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III-2-7> 참조). 즉, 주 3회 이상 읽는다는 응답은 양부모가정이 48.1%로 가장 높아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영유아와 함께 책을 읽는 빈도가 높았고, 조손가정은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비해 이러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와 함께 만들거나 그리기 활동을 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손가정보다 양부모가정이 주 3회 이상 영유아와 함께 만들거나 그리기 활동을 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조손가정에서 주 3회 이상 영유아와 만들거나 그리기 활동을 함께 한다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조손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양육자가 직접 영유아에게 글자나 수를 가르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은 각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나왔으나 조손가정에선 거의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3.3%로 월등히 많았다.

가족유형에 따라 영유아와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함께 신체운동을 하는 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이 주 3회 이상 영유아와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을 하는 횟수가 많았다. 반면, 이러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조손가정의 응답이 83.3%로 가장 높아 주양육자가 조부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유아들이 실외활동 빈도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7> 평소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구분	양부모	한부모	조손	단위: % $\chi^2(df)$
함께 책읽기				
주 3회 이상	48.1	27.3	-	59.63(4)***
주 1~2회	38.2	45.5	16.7	
거의 안함	13.7	27.3	83.3	
만들기 또는 그리기				
주 3회 이상	22.7	13.3	-	21.33(4)***
주 1~2회	40.3	39.2	8.3	
거의 안함	37.0	47.6	91.7	
글또는 수 가르치기				
주 3회 이상	36.1	30.1	8.3	17.97(4)**
주 1~2회	35.3	37.1	8.3	
거의 안함	28.6	32.9	83.3	
함께 놀이터 가거나 신체운동하기				
주 3회 이상	49.2	25.9	8.3	56.76(4)***
주 1~2회	35.1	46.9	8.3	
거의 안함	15.8	27.3	83.3	

p < .01. *p < .001.

가족유형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도서관에 간 경험 유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은 아니오라는 응답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아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조손가정은 아니오라는 응답이 91.7%로 압도적으로 많아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영유아와 함께 도서관에 간 경험이 많으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유형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본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양부모와 한부모가정이 각각 그렇다 26.1%와 24.5%로 나타난 반면 조손가정에선 단 한가정도 최근 6개월간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보러간 경험이 없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도서관에 간 경험을 조사했을 때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결과이다.

가족유형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미술관, 박물관, 고궁 방문 경험 유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인형극, 뮤지컬 관람 경험여부와 비슷한

경향으로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에서 그렇다는 답변이 각각 24.8%, 15.4%로 아니오라는 답변보다 훨씬 적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고 조손가정에선 그렇다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같았다.

가족유형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유아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간 적이 있는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영유아와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간 경험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이 영유아와 함께 하는 활동이나 문화체험 등의 경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조손가정의 양육환경이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다. 영유아기가 성장과정 중 다양한 체험에 의해 지식을 습득하고,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과 조손가정 특성상 조부모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해하여 국가에서 이러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 및 조부모를 위한 부모·양육교육 등의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2-8> 최근 6개월간 자녀와 함께 한 문화활동 경험 유무

	양부모	한부모	조손	$\chi^2(df)$
도서관에 간 경험				
유	35.3	32.2	8.3	4.09(2)
무	64.7	67.8	91.7	
인형극, 뮤지컬 관람경험				
유	26.1	24.5	-	4.27(2)
무	73.9	75.5	100.0	
미술관, 박물관, 고궁방문 경험				
유	24.8	15.4	-	9.12(2) [*]
무	75.2	84.6	100.0	
놀이공원, 동물원에 간 경험				
유	57.6	44.8	8.3	22.82(2) ^{***}
무	42.4	55.2	91.7	

*p < .05. ***p < .001.

3) 영유아자녀 양육의 어려움

먼저 조사대상 가정이 직면한 어려운 점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I-2-9>에 제시하였다.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영유아 양육 및 교육, 주택 및 주거관련 문제,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환자의 간병 및 치료, 일상생활에서 삶의 의욕상실, 좌절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9>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

가중치 순위	구분
1	경제적 어려움
2	대상영유아 양육 및 교육
3	주택 및 주거관련 문제
4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5	환자의 간병 및 치료
6	일상생활에서 삶의 의욕상실, 좌절감

조사대상 부모가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한 대답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⁵⁾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I-2-10>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들은 영유아의 교육·보육비 납부가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으며, 영유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사·공교육비를 제외한 대상아동 양육비 납부, 주거공간 협소 및 설비 미흡, 영유아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어려움 순으로 양육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1순위,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1순위에 200%, 2순위에 100%의 가중치를 부여한 값으로 계산하였음.

<표 III-2-10> 영유아를 양육하면 느끼는 어려움

가중치 순위	구분
1	대상영유아 교육·보육비가 부담스러움
2	대상영유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3	대상영유아 양육비가 부담스러움(사공교육비 제외)
4	주거 공간 협소 및 설비 미흡(방, 목욕시설 등)
5	대상영유아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이를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가정은 교육·보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았으나, 한부모가정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응답도 11.2% 이었다. 조손가정은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41.7%였으며, 학습지도 방법을 몰라서 어렵다는 응답이 33.3%로 나타나 가족유형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유형에 따른 지원이 다르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표 III-2-11> 참조).

<표 III-2-11> 가족유형에 따른 영유아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내용	양부모	한부모	조손
영유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22.3	27.3	41.7
유치원/보육시설 등 육아지원기관이 부족함	5.7	1.4	-
교육/보육비가 부담스러움	27.3	18.9	8.3
사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움	10.9	8.4	-
양육비가 부담스러움(사/공교육비 제외)	12.6	14.0	16.7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1.5	3.5	-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5.0	4.9	33.3
주거공간의 협소 및 설비 미흡	6.9	7.7	-
건강관리가 어려움	2.3	2.1	-
취업으로 인해 영유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함	1.7	11.2	-
없음	3.8	0.2	-
계	100.0(476)	100.0(143)	100.0(12)

가장 걱정되는 영유아의 발달 영역에 대하여 조사대상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걱정되는 영역이 없다는 응답이 29.2%, 정서발달 20.2%, 사회성발달 18.2%, 신체발달 13.4%, 언어발달 12.0%, 인지발달 7.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가정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영유아의 정서·사회성발달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걱정되는 발달영역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양부모가정의 부모는 사회성발달이 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서발달이 17.3% 순이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정서발달 28.6%, 사회성발달과 신체발달이 13.5% 순이었다. 조손가정의 양육자는 정서발달과 언어발달을 걱정하는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아 다른 발달보다 월등히 걱정되는 발달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부모들이 영유아의 발달영역 중 가장 걱정하는 영역은 정서·사회성발달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정 부모들은 영유아의 정서·사회성발달 지원을 돋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III-2-12> 걱정되는 영유아 발달 영역

단위: %(명)

구분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없음	계(명)	$\chi^2(df)$
전체	13.4	12.0	7.1	18.2	20.2	29.2	100.0(665)	
가족유형별								
양부모	13.5	12.0	6.7	20.0	17.3	30.5	100.0(475)	18.82(10)*
한부모	15.0	10.0	6.4	15.0	28.6	25.0	100.0(140)	
조손	-	33.3	8.3	8.3	33.3	16.7	100.0(12)	

*p < .05.

4) 육아지원 정책 요구

조사대상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48.4%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의 확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3> 참조).

<표 III-2-13>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내용	빈도	비율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76	11.4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324	48.4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81	12.1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27	4.0
교사의 전문성 향상	35	5.2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7	1.0
영유아발달계좌	25	3.7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	26	3.9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21	3.1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의 확대	43	6.4
기타	4	0.6
계	669	100.0

이를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부모가정은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의 확대,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가정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 확대,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도 순이었다. 조손가정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발달계좌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2-14> 참조).

<표 III-2-14> 가족유형별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내용	양부모	한부모	조손	$\chi^2(df)$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12.6	9.1	8.3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48.7	38.5	58.3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2.8	12.6	8.3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2.3	10.5	-	
교사의 전문성 향상	5.9	4.2	-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1.1	0.7	-	46.05(22)**
영유아발달계좌	3.2	4.9	16.7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4.4	3.5	-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3.4	2.8	8.3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 확대	4.8	13.3	-	
기타	0.8	-	0	
계	100.0(476)	100.0(143)	100.0(12)	

**p < .01.

나. 다문화가정 육아 실태 및 교육⁶⁾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80개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역교육청별 4개 유치원(공립 2개원, 사립 2개원)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발송한 후 지역교육청을 통해 회수된 질문지(3,000여개) 중 다문화가정(약 200여개)만을 추출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1) 다문화가정 일반적 특성

다문화가정의 거주지역 규모는 읍·면 지역이 6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소도시 20.8%, 대도시 12.0%의 순으로 많아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다문화가정이 많다.

6) 장명림·김은영·이정립·박수연(2009).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정책연구 200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표 III-2-15> 다문화가정 거주 지역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대도시	22	12.0
중소도시	38	20.8
읍·면지역	123	67.2
합계	183	100.0

다문화가정의 가족 구성은 부부와 자녀가 6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18.9%, (한)조부모와 한 부모 및 자녀 6.1%의 순으로 많았다.

<표 III-2-16> 다문화가정 가족 구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부부와 자녀	135	68.9
한 부모와 자녀	4	2.0
친인척과 자녀	4	2.0
(한)조부모와 자녀	3	1.5
(한)조부모와 한 부모 및 자녀	12	6.1
(한)조부모와 양부모(부부) 및 자녀	37	18.9
기타	1	0.5
합계	196	100.0

다문화가정의 가구 소득 수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층이 12%, 차상위층이 19.9%로 1층과 2층이 31.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모른다는 응답도 31.9%로 많아 정확한 비율을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보겠다.

<표 III-2-17> 다문화가정 가구 소득 수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층	20	12.0
차상위층	33	19.9
3층	17	10.2
4층	20	12.0
5층	21	12.7
6층 이상	2	1.2
모름	53	31.9
합계	166	100.0

다문화가정에서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주는 사람이나 기관은 어머니인 경우가 7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인척 15.9%, 부 6.7%, 기관 1.5%, 형제자매 1.0%, 비혈연인 0.5% 순이었다.

<표 III-2-18> 다문화가정에서 유치원 하원 후 유아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곳)

구분	빈도(명)	비율(%)
부	13	6.7
모	144	73.8
친인척	31	15.9
비혈연인	1	0.5
보육시설, 학원, 복지관 등 기관	3	1.5
기타	1	0.5
형제자매	2	1.0
전체	195	100.0

2) 다문화가정 영유아자녀 관리 및 지도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가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76.9%, 일주일에 3일 이상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17.6%로 대부분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9> 다문화가정 자녀가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날

구분	빈도(명)	비율(%)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153	76.9
일주일에 3일 이상	35	17.6
일주일에 2일	3	1.5
일주일 내내 불규칙적으로	7	3.5
기타	1	0.5
전체	199	100.0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의 건강, 청결, 영양 및 생활습관 등을 지도함에 있어서 예방접종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42.5%, 신체청결은 38.4%로 가장 많았으나 집안 청결, 기본 생활습관 지도 및 TV 등의 시청시간 제한의 경우는 거의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정기검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TV 등의 시청시간 제한의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도 높아 타 항목에 비해 부모의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0>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 청결/위생, 영양, 생활습관지도 실행정도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예방접종	0.5	1.5	15.5	39.0	42.5	100.0(198)
정기검진	1.5	14.0	34.0	33.0	17.5	100.0(200)
신체 청결	0.0	2.0	21.2	38.4	38.4	100.0(198)
집안 청결	0.5	1.5	29.3	44.4	24.2	100.0(198)
균형 있는 식사	1.0	3.5	51.8	32.2	11.6	100.0(199)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3.6	11.7	42.6	32.5	9.6	100.0(197)
기본생활습관 지도	1.0	3.6	37.6	40.6	17.3	100.0(197)
TV 또는 비디오(DVD) 시청시간 제한	1.5	9.5	38.7	39.2	11.1	100.0(199)

다문화가정 부모가 하루에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1시간 내외가 3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분 내외 27.6%, 2시간 내외 23.1%, 3시간 이상 13.6% 순이었다. 놀아주지 않는 경우는 4.0%로 나타났다.

<표 III-2-21>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

	빈도(명)	비율(%)
놀아주지 않음	8	4.0
30분 내외	55	27.6
1시간 내외	62	31.2
2시간 내외	46	23.1
3시간 이상	27	13.6
기타	1	0.5
전체	199	100.0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책 읽어주기, 노래 부르기, 만들기나 그리기, 글자 및 수 가르치기, 게임하거나 놀아주기,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상점에 가기 및 집안일 하기 등 모든 활동에서 주 1~2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만들기나 그리기, 게임하거나 놀아주기 및 집안일 하기는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각각 28.9%, 31.3% 및 35.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2-22>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단위: 명, %

	책 읽어 주기	노래 부르기	만들기나 그리기	글자, 수 가르치기	게임 하거나 놀아주기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운동	우체국, 은행, 상점가기	집안일 하기
하지않음	13.6	26.5	28.9	10.7	31.3	25.4	21.6	35.7
주 1~2회	53.5	48.0	55.8	54.6	50.8	57.0	56.2	51.5
주 3회 이상	32.8	25.5	15.2	34.7	17.9	17.6	22.2	12.8
전체	100.0 (198)	100.0 (196)	100.0 (197)	100.0 (196)	100.0 (195)	100.0 (193)	100.0 (194)	100.0 (196)

다문화가정 부모의 최근 6개월간 자녀와 문화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가기 및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에 가는 활동은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등에 가는 활동은 경험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들 보다 많았다.

<표 III-2-23>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유무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도서관 가기	37.9	62.1	100.0(195)
인형극,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가기	45.4	54.6	100.0(196)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가기	67.9	32.1	100.0(196)

3)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자녀 양육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우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걱정되는 부분이 없다는 응답이 20.6%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기타, 인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4>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

구분	빈도(명)	비율(%)
신체 발달	34	17.5
언어 발달	36	18.6
인지 발달	13	6.7
사회성 발달	35	18.0
정서 발달	28	14.4
기타	7	3.6
없음	40	20.6
인성	1	0.5
합계	194	100.0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학원,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유치원 교육비가 부담스러움, 자녀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부족함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25>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순위	내용
1	학원, 학습지 등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움
2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음
3	유치원 교육비가 부담스러움
4	자녀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음
5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함

4)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 정책 요구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유아교육 지원 사업, 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 아동발달계좌, 교사의 전문성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라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6> 다문화가정이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내용	빈도(명)	비율(%)
국공립유치원 확충	31	13.7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101	44.7
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	19	8.4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	21	9.3
교사의 전문성 향상	8	3.5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6	2.7
아동발달계좌	18	8.0
유아교육 지원 사업	21	9.3
국립의 시설 개선	1	0.4
합계	226	100.0

주: 중복응답 문항은 아니었으나 중복으로 답한 경우도 포함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유치원 정규교육외에 원하는 서비스로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 및 인지 발달지원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한국어 프로그램, 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7> 다문화가정의 유치원 정규교육 외 추가 희망 서비스

순위	내용
1	학습지원 프로그램
2	언어·인지 발달지원 프로그램
3	특기적성 프로그램
4	한국어 프로그램
5	사회·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

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실태 및 요구⁷⁾

1) 북한이탈주민 부모·가족 특성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93.4%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아버지는 45.5%만이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직업활동을 통해 가구소득을 유지하는 우리사회 구조에서 아버지의 절반이 넘는 수가 직업이 없다는 사실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제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기준 월평균 급여수준도 상당히 낮은데 5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37.5%, 101에서 150만원 사이는 26.8%로서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가 약 64%를 차지하며, 50만원 이하도 23.2%나 되었다.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11명의 어머니의 월평균 급여도 5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가정의 88.6%인 대다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육아정책연구소(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가정의 부모 167명(취학전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까지 총 220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조사 대상은 서울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인천 부평구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동(洞)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가구명단을 확보한 것임.

<표 III-2-28> 현재 북한이탈주민 부모 취업상황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직장있음	6.6	45.5
정규직(상근직)	9.1	23.2
비정규직(임시직)	27.3	30.4
일용직	54.5	42.9
자영업	9.1	3.6
월평균급여(세전)		
50만원 이하	63.6	23.2
51~100만원 이하	36.4	37.5
101~150만원 이하	-	26.8
151~200만원 이하	-	10.7
301~350만원 이하	-	1.8
계	100.0(167)	100.0(12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결혼 상태는 여느 집단에 비교해 보더라도 복잡하다. 탈북 이전에 가정을 꾸리더라도 탈북 이후 남한 입국까지 또 다른 배우자와 동거 내지는 결혼을 하는 사례도 많으며, 남한 입국 이후에도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결혼 상태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결혼 상태별 조사결과를 모두 조합하면 다음과 <표 III-2-29>와 같다.

가장 많은 결혼 상태별은 제3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2.8%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결혼 상태는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동거상태인 가정이 13.8%나 된다는 점과 사별 및 이혼·별거로 한부모 가정의 비율도 합치면 13.8%로 적지 않다는 점이다.

<표 III-2-29> 결혼상태

단위: %(명)

구분	비율
결혼상태별	
미혼(동거)	13.8
남한에서 처음결혼	18.0
북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살고 있음	18.6
북에 배우자 있으나 남한에서 재혼	5.4
북에 배우자 있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3.0
제3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22.8
제3국 배우자 있으나 남한서 재혼	0.6
제3국 배우자 있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4.2
사별	2.4
이혼/별거	11.4
계(명)	100.0(167)

2)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육아 실태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답률이 77.8%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아동양육 및 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과 아동 양육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30> 현재 가족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빈도(%)
경제적 어려움	77.8
대상아동양육 및 교육	60.5
환자의 간병 및 치료	6.0
주택 및 주거관련 문제	13.8
가족 간의 갈등이나 대화단절	1.8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15.6
기타	4.2
없음	6.0

본 설문조사 대상 220명 아동의 출생국가별로 살펴보면, 2005년 이전에는 북한태생 아동들이 많았다면, 2005년 이후부터는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정착이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표 III-2-31>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출생년도(220명)

단위: %(명)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전체	0.9	4.1	7.7	7.7	5.9	8.2	9.1	12.7	12.3	22.3	9.1	100.0(220)
출생국가												
남한	0.0	0.0	0.7	1.4	2.0	6.1	11.5	16.2	16.2	32.4	13.5	100.0(148)
북한	5.6	5.6	22.2	25.0	16.7	16.7	2.8	0.0	5.6	0.0	0.0	100.0(36)
중국	0.0	21.2	24.2	18.2	12.1	6.1	6.1	9.1	3.0	0.0	0.0	100.0(33)
기타	0.0	0.0	0.0	0.0	0.0	33.3	0.0	0.0	33.3	33.3	0.0	100.0(3)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주양육자는 거의 대다수(98.3%) 어머니로 나타났다. 미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기관이 없어서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적당한 일이 없어서 17.5%, 건강상의 이유로가 16.9%, 자녀양육과 가사 일이 중요해서가 15.1%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취업의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가 여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이 나온 점이 눈에 띈다. 탈북과 남한입국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담보로 상당 시간을 보낸 만큼 건강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누적된 심리적 압박감까지 겹쳐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건강 문제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2-3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미취업 이유(1순위)

단위: %(명)

	일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일이 없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기관/ 사람 없음	자녀 양육과 가사일이 더 중요함	근무 시간이 맞아서	건강 상의 이유로	직장/ 육아 병행 어려움	기타	계(명)
전체	0.6	17.5	24.7	15.1	8.4	16.9	5.4	11.4	100.0(166)
연령별									
영아	1.0	11.8	28.4	15.7	6.9	15.7	7.8	13.7	100.0(102)
유아	-	22.2	18.5	16.7	11.1	18.5	1.9	11.1	100.0(54)
미취학아동	-	50.0	20.0	-	10.0	20.0	-	-	100.0(10)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종류를 살펴보면, 보육 시설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96%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3.2%, 0.8%에 불과했다.

<표 III-2-3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단위: %(명)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학원	계(명)
전체	96.0	3.2	0.8	100.0(122)
연령별				
영아	100.0	-	-	100.0(52)
유아	94.8	5.2	-	100.0(58)
미취학아동	83.4	8.3	8.3	100.0(12)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초등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가 39.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 주고 싶어서가 32.9%, 집에서의 양육이 힘들어서가 13.7%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2-34> 참조).

<표 III-2-34> 육아지원기관에 보내는 이유(1순위)

단위: %(명)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려고	취업으로 인한 자녀 양육으로	초등학교 가서 잘 적응하게 하려고	집에서 아동의 양육이 어려움	기관 이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말씨, 남한문화 등의 자녀교육을 위해	기타 ⁸⁾	계(명)
전체	32.0	5.7	39.3	13.1	3.3	3.8	4.9	100.0(122)
연령별								
영아	25.0	7.7	25.0	23.1	7.7	3.8	7.7	100.0(52)
유아	39.7	3.4	46.6	6.9	-	-	3.4	100.0(58)
미취학아동	25.0	8.3	66.7	-	-	-	-	100.0(12)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아동양육을 하는 데 있어 각 분야별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낮은 경제력이 4.10으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아동학습지도가 3.98로 응답하여 자녀교육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 기타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 비용을 절감해 주어서’, ‘어머니 몸이 불편해서’가 포함됨.

<표 III-2-35>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점(5점척도)

구분	평균
아동의 남한말 구사능력	2.56
가정의 낮은 경제력	4.10
양육방식에 관련해서 가족 간의 갈등	2.90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선입견	3.47
아동이 남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 하는 것	2.99
믿고 맡길 사람이나 시설이 없음	3.44
아동학습지도의 어려움	3.98
계(인원 수)	100.0(167)

자녀의 발달 중 가장 우려되는 영역에 대한 응답으로는 없다가 48.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있다는 응답은 신체발달이 18.0%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성, 정서발달 순이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미취학아동의 경우 신체발달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다.

<표 III-2-36>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가장 우려되는 발달영역

단위: %(명)

구분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없음	계(명)
전체	18.0	9.0	1.7	12.4	10.7	48.3	100.0(178)
연령별							
영아	17.0	8.5	0.9	8.5	10.4	54.7	100.0(106)
유아	15.0	8.3	3.3	20.0	11.7	41.7	100.0(60)
미취학아동	41.7	16.7	-	8.3	8.3	25.0	100.0(12)

하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육 관련된 부모교육의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7.1%, 매우 도움이 되었다 5.9%로 과반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평균점도 3.50점으로 대부분이 하나원에서 받은 부모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37> 하나원에서의 양육관련 부모교육 도움정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
전체	3.50	8.8	38.2	47.1	5.9	100.0(34)
어머니 연령						
20대 이하	3.17	16.7	50.0	33.3	-	100.0(21)
30대	3.50	10.0	35.0	50.0	5.0	100.0(111)
40대	3.75	-	37.5	50.0	12.5	100.0(35)

3)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육아지원 정책 요구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를 묻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양육비 보조(62.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13.8%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육아지원으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38> 희망하는 육아지원서비스 종류

단위: %(명)

구분	양육비 보조	맞춤형 유아교육 기관	교육 지원	부모 교육	부모 및 아동 상담	아동/가족 건강의료 지원	문화활동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계
전체	62.3	10.2	13.8	1.8	3.0	2.4	3.0	3.6	100.0(166)
어머니연령									
20대 이하	66.7	14.3	4.8	9.5	4.8	-	-	-	100.0(21)
30대	61.3	10.8	15.3	-	3.6	1.8	4.5	2.7	100.0(111)
40대	62.9	5.7	14.3	2.9	-	5.7	-	8.6	100.0(35)

IV.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 방안

1. 취약계층 가정 지원 방향

첫째,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를 위해서는 종합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영유아기에 접하게 되는 취약한 교육환경은 이후의 성장·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다른 어떤 단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영유아들은 성공적인 부모 역할모델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학습의 기저가 되는 기본적인 기술,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의 초기에 적절히 개입하여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결손을 없애거나 예방해 주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돋고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적 배려와 더불어 건강, 안전, 영양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조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저소득 가정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예방함은 물론 이후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정서, 언어 및 인지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적용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급과 활용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정부 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 내에서의 자료의 활용 및 전문인력의 참여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정신건강과 영유아기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영유아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정환경 변인을 반드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영유아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09년도 연구소에서 추진한 연구에서 저소득 가정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

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유아를 위한 양육기술 및 정보 지원은 물론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또한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 가정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지도시의 프로그램의 활동 구성,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전달 방식 등이 가족유형에 따라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소의 조사에서도 가정 및 가정의 유형별(양부모,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등)로 자녀양육실태와 정책 지원 요구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가정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손가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담당해야 할 영유아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한부모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므로 영유아 양육 지원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전국규모의 보다 광범위한 사업의 영유아 및 부모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가정 유형에 따른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약계층 가정 지원 사업내 전문인력을 위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는 기관에서 영유아를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은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자료와 매뉴얼들을 원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스스로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구를 직접 제작할 시간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제작에 교사가 따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지 않도록 자료 세트를 완전히 준비·제공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자료제작에 대한 노하우나 도움말을 제공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집이나 활동 진행 매뉴얼에서는 가정 방문 시 가정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활동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일

반적이고 간단한 것을 포함·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의 책임자나 중간 관리자들을 위한 매뉴얼도 필요하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영유아를 지도하지는 않더라도, 취약계층 가정의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사업이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취약계층 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및 서비스의 종합화가 필요하다.

유치원, 보육시설, 유관기관, 지역사회내 공공기관 등의 유아교육·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종합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적자원의 바람직한 육성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의 적절한 책임 분담도 요구된다. 즉, 지역 내 대학, 기업, 문화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가정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부처 사업 4가지(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하나센터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시범적용에 포함하였다.

이들 사업들은 지역내 센터나 복지관 등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전달체계가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자만 있는 경우와 영유아를 1:1로 직접 지도하는 교육자만이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였다.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은 물리적 공간, 위계적인 전달체계, 사업 관리자와 교육자 등이 모두 보유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서 이러한 요소를 완벽하게 갖출 수 없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사업들 간의 특징과 장점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하나센터의 물리적 공간을 타 사업의 소집단 교육 시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교사가 없는 통일부 하나센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희망유아교육사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하

다. 특히, 사업간 협력을 통해 이미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을 보다 광범위하게 상호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0년도에는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저소득층가정, 탈북가정 지원 중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추가·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정부 부처 사업 외에도 유아교육·보육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지역내서의 영유아의 교육·보육 및 부모교육을 어떻게 담당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지역내 모든 인적·물적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연계하는 방안을 모색·제시하고자 한다.

2.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지원 방안

본 연구소 조사 결과, 취약계층 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시간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각 가정의 특성과 요구를 보다 세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교육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한부모가정의 유아를 위한 정서 순화 프로그램(예: 놀이치료를 통한 마음 열기 및 애정 느끼기 프로그램, 동화활동, 미술활동, 신체활동 등)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 발음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영유아 대상 뿐 아니라, 취약계층 유형별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취약계층 가정의 부모는 본인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함께 자녀의 학습지도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가정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 영유아가 유아교육 기관에 재원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사용가능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일 활동을 가정에 알리는 노력을 통해 가정 및 부모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는 공공기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순회)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영유아 및 부모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각 가정 유형 및

영유아의 부족한 점을 반영한 가정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결핍되고 있는 건강과 영양, 정서, 학습 등을 보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소 교육취약계층 유아대상의 조사에 의하면, 교육취약계층 가정에서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따라서 정서적인 면과 기본적인 학습지원 뿐 아니라, 일반 유아들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지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더욱 기본적으로는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한 아침, 간식, 우유 지원, 영유아의 주기적인 건강 및 정서 상태 점검이 필요하고, 정서, 학습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 방문 가능한 교사 인력풀 구축 및 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의 특성상 문화적인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예: 박물관 견학 지원, 공연 관람 가족티켓 지원, 전시장 견학, 놀이공원 체험 등) 도 제공되어야 한다.

가. 저소득층가정 지원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물질적 결핍은 성장하는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기 보다 아동 초기에 경험하는 가정의 빈곤은 발육부진, 발달지체 등과 같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부터 학업부진, 학교 중퇴 등과 같은 인지발달의 문제 및 사회·정서상의 문제를 내포한다.

저소득가정 영유아를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지원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 외에 가정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약한 가정이므로 가정의 경제력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인식에 근거하여 다양한 유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영유아는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부모는 언어발달과 정서발달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는 TV 시청이나 게임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형극을 보거나 놀이공원을 가는 등 문화적인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 청결, 영양, 생활습관 지도를 상대적으로 잘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의 정규교육 이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

교육기관 방과 후에 TV시청이나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과 후 이들과 놀아주고 생활습관 면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는 가정 방문을 기본으로 하되, 그 외에도 유아교육기관이나 복지관 등 의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나.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 영유아들은 일반적으로 정서적 불안정 문제와 사회적응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도 한부모가정 영유아의 부모는 영유아의 정서발달을 가장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TV시청 제한이나 취침지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등 자녀 지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부모들은 자녀의 특기적성 지원이나 대상아동에 맞는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학습준비에 대한 요구도 다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으며, 균형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영유아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며,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기초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육아를 위한 인력 지원과 함께 영양 관리 및 바람직한 자녀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도 요구된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부모 자신의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한부모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영유아 양육 지원에 대한 도움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모 역할을 수행할 만한 여력이 없는 관계로 부모와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며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다. 조손가정 지원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정서, 인지, 사회적 적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인지와 언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 또한, 조부모는 음식 제한, TV 제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잘 못하고 있고,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유아는 혼자 놀이를 하거나 성인의 돌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며, 조부모는 손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고 문화활동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은 양부모나 한부모가정보다 특히 가정방문 1:1학습지원에 대한 요구와 교사의 가정방문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와 언어교육 프로그램 등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인적 지원이 필요하며, 부모의 양육과 교육을 보완해줄 인적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내 대학의 유아교육전공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활용한 인적자원 풀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조손가정 유아들 대상으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조부모들은 고연령으로 인해 건강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조부모대상의 건강 및 의료지원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라.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생활하는 데서 오는 문제로 언어문제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과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 부모는 유아의 언어발달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구도에 있어서는 정서와 사회성 발달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지와 언어 발달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언어발달 지원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발달 지원과 함께 정서, 사회, 인지 등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이 시급하다.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기본적인 언어활동을 비롯하여 모든 발달 영역에 대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가정으로 방문하여 개별 지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종합검진,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낫게 나타났고, 음식제한 등 기본적인 생활 지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가는 빈도나 인형극 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부모는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과 영양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교육은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어 지도 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다문화 부모 국가의 문화와 배경에 기초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갖도록 장차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해가도록 돋는 것이다.

마. 북한이탈주민가정 지원

첫째,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통일부이지만, 통일부는 유아교육, 보육 중심의 육아지원 부서와 인력이 부재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을 위해 현재 영유아 육아지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와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원 체계 하에서 각 서업들 간의 연계 협력을 활성화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할 전문기관 및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책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담당 인력풀이 적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들을 하나원 퇴소 이후 정착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북한이탈주민 전문 실무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매해 3,000여 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착 이후 결혼과 출산을 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영아의 출생에서부터 육아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관리 ·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인 하나센터 내에 영유아 가정 지원 사업을 특성화

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때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할 교육사가 하나센터 자체사업에는 없으므로 지역 내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여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를 연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범사업에서 희망유아교육사 인력을 지원받아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파견하여 육아지원프로그램(영유아용, 부모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센터와 가정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지원사업이나 희망유아교육사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같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연계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은 구직보다는 영유아 양육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들이 앞으로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원의 교육과정이나 하나센터의 사업에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를 위한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영유아 양육을 포함하는 부모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일반 저소득층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포함되는 부문도 있겠지만, 탈북 가정 및 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주제나 활동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에 취약 양육지원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는 특정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 이는 하나원을 퇴소하면서 제공받는 임대아파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직업을 구해야만 한다. 그런데 영유아가 있는 여성은 구직도 어려울뿐더러, 직업을 구했다 하더라도 육아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내 기존의 유아교육·보육시설에서의 이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최초의 집단 교육 장소인 하나원에서부터 영유아에게 전

문적인 교육과 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처음으로 적응 생활하는 하나원에서부터 질 높은 육아지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하나원 내에는 영아들을 보육하는 곳으로 ‘유아방’과 유아들이 주변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녀온 후에 생활하는 ‘유치부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유아방은 미인가 보육시설이란 문제점이 있으며, 유치부 방과후 교실은 유아들이 방과 후에 보다 심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적 경험을 하기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에 와서 처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하나원에서부터 보다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하나원에서 연계 취원시키고 있는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사 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IV-2-1>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요약

영역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공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유아교육 · 보육비 지원 지속적 확대 - 육아지원기관의 교육 ·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 기본학습 지도 지원, 특기적성 및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 부모교육을 위한 방문 교사의 가정 방문 프로그램 제공(유아교육 · 보육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이용한 소집단 교육 방안 모색 가능) - 정부 부처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내실화 및 지역내 부처의 사업 연계 지원(인력 및 프로그램 등) 				
유아 및 부모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발달 및 언어, 정서 미흡 - 부모의 자존감 저하 - 가족간 유대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 사회성, 신체발달 우려 - 부모-자녀 함께 하는 시간 부족 - 가정경제책임 부담 및 낮시간 부모 프로그램 참여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놀이 활동 가장 취약 - 정서, 언어 발달 우려 - 부모의 기본적인 자녀도 활동 조부모가 거의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이해 부족 - 의사소통 문제 - 사회정서발달, 언어, 인지 발달 우려 - 건강, 생활 지도 및 학습 지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사회성 발달 우려 - 부모 사용 언어의 이질성 - 선입견으로 인한 부적응 및 복잡한 가족관계, 양육방식의 차이, 부모 직업의 불안정성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및 가족 기능 회복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연계 ·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정서 순화 및 기초 학습 지도 - 부모자신의 정신건강 및 양육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학습지도 및 기본생활 습관 - 성인동반활동, 문화체험 -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한국어 지도 기본, 유아 종합발달지원 프로그램 - 부모역할 강화 - 문화체험 및 학습지도 및 정보 ·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학습지도 정보 · 자료 제공 - 일반적 사회적응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지원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발달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보호 · 학습 지도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학습 지도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가정 취학전 영유아 양육 및 지도 전문 담당 인력 지원

3.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여기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3개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2009년도 1차년도 연구추진 결과와 함께 2010년도에 추진할 2차년도 연구 계획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연구 과제를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의 범위 및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1)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이란?

- ▶ 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내에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둘째, 영유아에게는 바람직한 교육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셋째, 부모에게는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넷째, 교사 및 전문인력에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하고,
다섯째, 지역 내 영유아 대상 사업 간의 연계 ·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 통합적인 육아지원 모형임.

2)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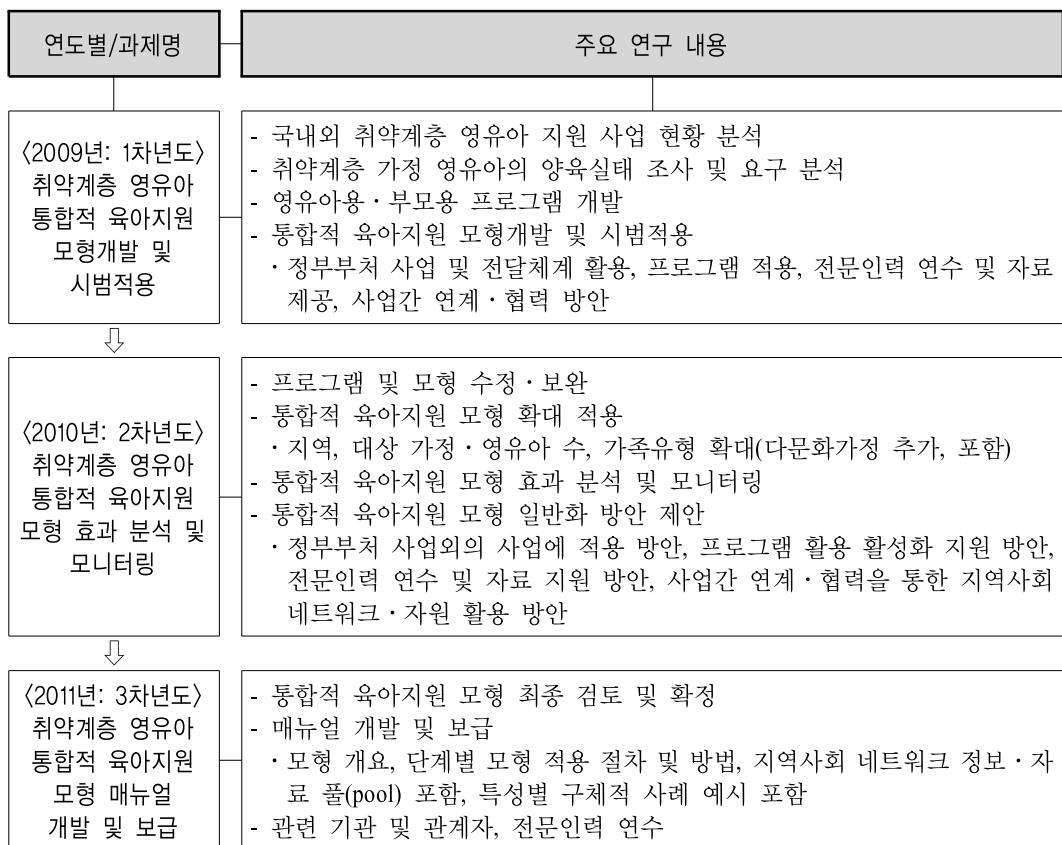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정부부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IV-3-1> 정부부처 취약계층 지원 사업별 전달체계 및 전문인력

정부부처명 (담당과)	사업명	전달체계	전문인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센터	보육교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교육청 및 학교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유아조정자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	교육청 및 지역단설공립유치원	희망유아교육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착지원사업	하나센터 (복지관에 위탁)	사회복지사

3)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3년차로 추진될 예정이며,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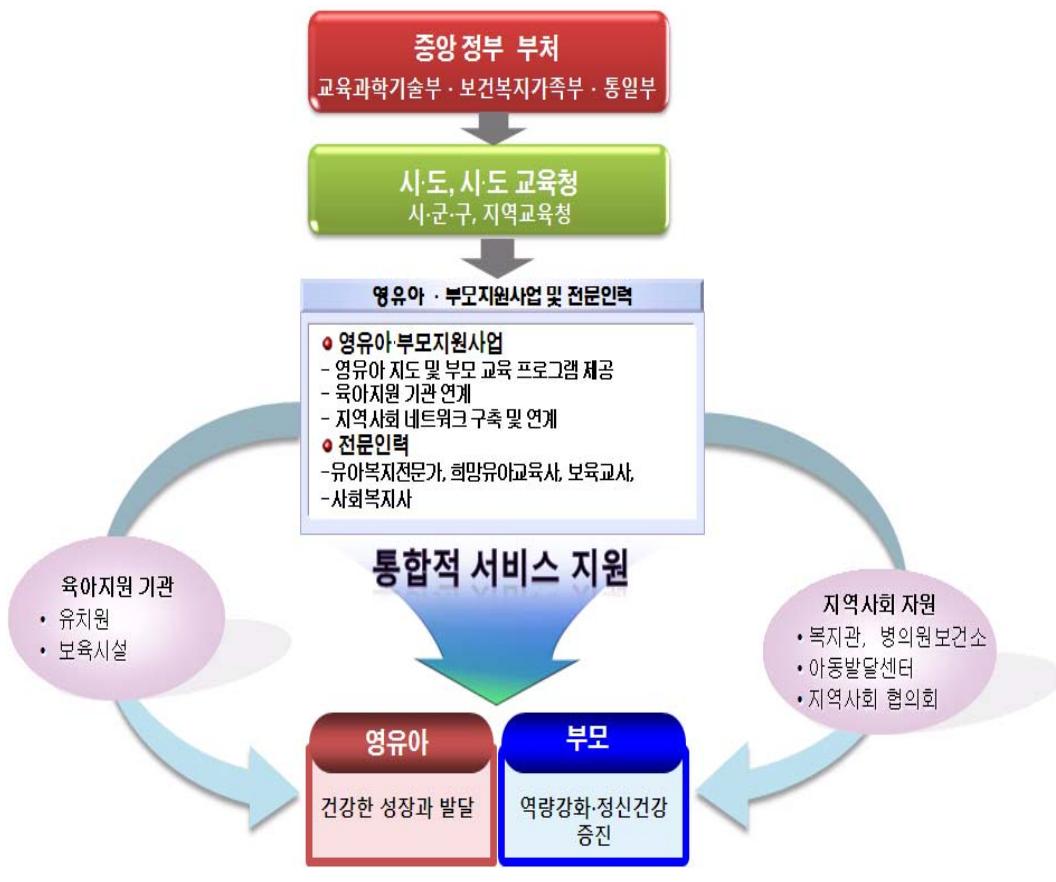


나.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2009년도 연구결과)

1)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개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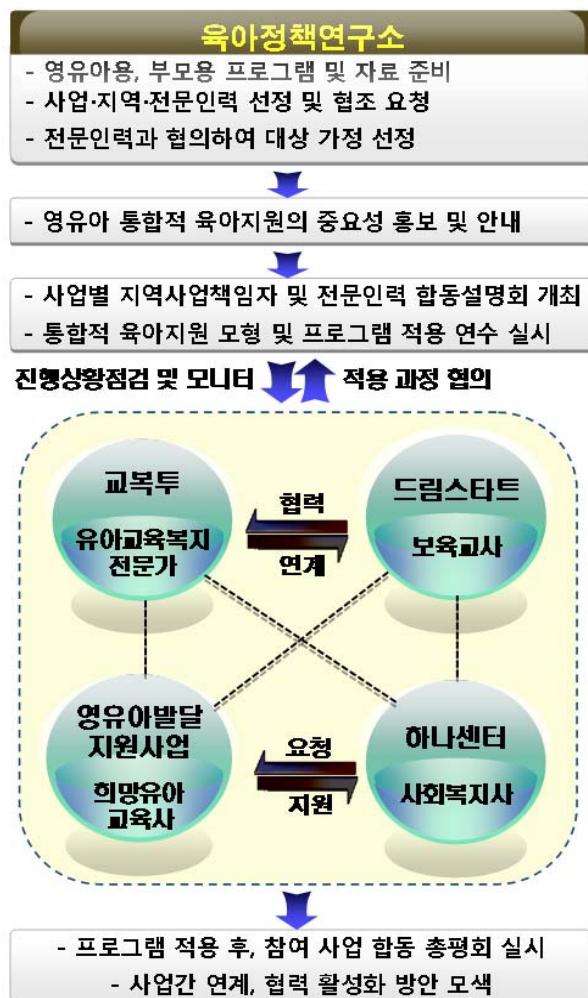
- 정부 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함.
- 영유아 및 부모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통합적 육아지원 기본 모형 개발과 함께, 가정유형별 지원 방안을 모색함.

2)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그림 IV-3-1]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3)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및 방법



[그림 IV-3-2]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및 방법

- * 위 그림에 2010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및 전문인력의 연계방안 추가 예정
- *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 추진 다문화 관련 연구
 - 다문화가정 유아 지원 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연구소 기본과제)
 -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협동과제)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유아교육 안내책자 번역·보급사업, 다문화가정 유아 및 부모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개발(교육과학기술부 수탁과제)

다. 2009년에 개발된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 영유아 프로그램을 보안 및 개발하고, 영유아의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부모교육용 양육 검사지와 프로그램(저소득층, 탈북가정용)을 개발하고 3개 시도, 4개 사업 및 25개 가정에서 현장적합성을 검토하였다.

2010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과 현장 사업간 연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다 확산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다.⁹⁾

국내 정부주도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를 위한 지도 프로그램(기관용), 유아를 위한 개별 지도 프로그램(개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별 및 집단용, 양육수준검사)이 부족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 영아와 유아를 위한 지도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 변형하거나 새로 개발하였으며, 취약계층 유아를 위해 취학전 준비를 위한 개념학습 활동을 개발하였다.

영아용과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개발자 모두 현장에서 수년간 영아와 유아를 지도하고 교육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전문가로, 영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활동에 대해 변형 및 수정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안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교육 및 발달 관련 전문가들에게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지,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영역별로 적절히 포함된 활동인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확인받았다.

<표 IV-3-2> 프로그램 총괄표

구분	특성	비고
지도 프로그램	영아용 취약계층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만1세와 2세를 구분하여 연령에 따라 기본생활습관, 인지·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의 세 영역으로 구분	만1세: 20개 기본생활습관 5개 언어인지발달 8개 사회정서발달 7개 만2세: 20개 기본생활습관 5개 언어인지발달 10개 사회정서발달 5개

9) 선행연구결과 및 정부부처 지원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현장 요구를 조사한 결과, 가정방문시 활용할 영유아용 프로그램과 부모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개발한 것임.

구분	특성	비고
유아용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개발한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의 활동을 취약계층 유아와 교사가 가정이나 기관에서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 취약계층 가정은 놀잇감이나 유아를 위한 책이 많지 않고 풍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가정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소품이나 교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	언어영역: 20개 인지영역: 20개 사회영역: 20개 정서영역: 20개
동화를 이용한 개념학습 활동 자료(유아용)	취약계층 유아의 개념습득을 돋기 위해 동화를 매개로 교사와 상호작용하여 동화를 통해 개념 습득 및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동화와 이와 관련된 활동지 개발	달달 무슨 달 어디에 숨을까 우산이 필요해
부모 교육	개별 지도용 프로그램	취약계층 가정의 부모에게 양육지원을 위해 기본적 욕구 충족, 발달지원 및 교육, 사회연계 등 3개 역할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영유아에게 하는 활동에 대해 시범을 보인 후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실시해 볼 수 있도록 20차시 프로그램으로 개발
	집단용 프로그램	취약계층 부모들을 집단으로 교육하기 위해 저소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의 특성을 조사 한 후 8개 영역의 주제를 선정하여 30개 내용으로 구성
	양육 수준 검사지	14개의 양육역할 지표를 근거로 부모의 양육수준을 검사하는 영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 개발

참고문헌

- 이선영(2000). 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통한 보육정책 방향: 부산광역시 보육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8).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구효진 · 최진선(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 김영미(2002). 탈북유아의 남한생활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인(20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 평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해영(1994).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향숙(2001).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선(2004). 조손 가족 아동의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태 · 권영덕(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나정 · 문무경 · 심은희(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OECD의 관점(CR2004-23 수탁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노은영(2009). 한부모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인철(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자활지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현주 · 김향희 · 김화수 · 신지철(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음성과학*, 15(3), 133-144.
- 문무경 · 조혜주(2008). 다문화가정 육아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민경화(2000).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모란(2002). 탈북아동의 남한 사회 적응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족부.

- 안연진(200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육아정책연구소(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부미(2003). 탈북가정 유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현장연구: 탈북적응교육 훈련 원(하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3(2), 115-145.
- 이소희 · 유미숙(2000). 아동복지. 서울: 형설출판사.
- 이지혜(2003).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경 · 서현 · 김동례(2009).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미래유아교육 학회지, 16(3), 1-24.
- 장명림 · 김은영 · 이정림 · 박수연(2009).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장혜경(2008). 새터민 가족의 문제와 정책방향. 서울: 한반도 평화연구원.
- 전익수(2001). 탈북청소년 초기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혜정 · 민성혜 · 이민영 · 최예영 · 장수지 · 조을순(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 조사 및 성장 지원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정문자 · 어주경(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정병호(2001). 탈북학생 사회,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개발연구(2001-1-05).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소연(2001). 북한이탈아동의 사회적응 멘터링 프로그램 기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 · 윤희원 · 권순희 · 박상철 · 박성혁(2006).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천현(2002). 탈북경로의 유형의 실태와 현황: 생계형 탈북에서 삶의 질 향상 위한 형태로 급증. 북한, 10, 65.

- 최대현 · 이인수 · 김현아(2007). 새터민 아동 · 청소년의 적응력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학회지*, 16(2), 277-291.
- 최명선 · 최태산 · 강지희(2006). 탈북 아동 ·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9(3), 23-34.
- 충남발전연구원(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기획연구 2008-02).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 통계청(2005). 인구총조사. 서울: 통계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8). 새터민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허인영(1999). 빈곤결손가정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연구: 가출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주은(2003). 북한이탈부모의 영유아양육변화와 문제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Cazen, A. (1968). *Day Car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rnic, K., & Greenberg, M. (1987). Mater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Influences on early mother-child relationship. In C. F. Z. Boukydis (Ed.),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s* (pp. 25-40). Norwood, NJ: Ablex.

토 론

발 표 :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강복정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팀장

김선희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정착지원센터 부장

전우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장

전연진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장



토 론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된 보고서는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가정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들 간의 연계방안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지원방안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곳에서는 토론의 형식을 빌려 몇 가지 점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자료 분석 지역을 드림스타트 사업, 교복투사업,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의 3개 사업이 모두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국한한 것은 자료의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토론자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는 교복투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제 조사대상이 된 영유아와 가족은 전체 사업대상의 극히 일부분이고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대상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2. 지원 방안에서 ‘종합 복지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원 활용 방안’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합 복지(혹은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할 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연계 · 조정은 그 중요성을 강조만 한다고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연계 ·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관리체계가 통

합적 서비스 체계의 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고서에서 제시된 각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의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취약 영유아와 가족의 관점에서 연계되고 조정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3. 실제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맞춤형 서비스’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일어난다기 보다는 각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따라 개별적인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한 서비스의 실천과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으로 나누어 제시된 지원 방안이 혹시 각 대상별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체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오해될까 우려된다. 그러한 구분 방식은 자칫 더욱 파편화된 서비스 체계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도 각기 다른 영유아와 가족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와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조정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 사례관리체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4. 지원 방안에서 보육(교육)과 복지 영역은 거론되고 있지만 건강 부분에 대한 제시가 미흡한 것은 아쉽다. 발달단계적인 측면에서 영유아기는 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산전관리로부터 시작하는 건강 지원이 통합적 서비스 체계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5.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실무자가 교복투사업의 유아교육전문가, 드림스타트의 보육교사, 영유아발달지원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 등 보육교사로만 제시되어 건강, 복지, 보육(교육)의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의 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역사회와 각 사업영역의 다른 발달분야 지원 전문가들(예를 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연계, 협조체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취약계층의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전달 모형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인 가정방문 모형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공급자 위주의 기관중심(*center based*)의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그렇고 취약계층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다. 보다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전달 방법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7. 보고서는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주 대상으로 통합적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모형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2008년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인 ‘시소와그네’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시소와그네’ 사업은 0세에서 6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교육), 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복지분야의 ‘통합적 사례관리 모델’, 건강분야의 ‘가정방문 건강증진’, 보육(교육)분야의 ‘가정방문 영유아 중재모델’, 부모역량증진 분야의 ‘부모교육’ 매뉴얼이 완성되어 실행 중인 사업이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연구진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시소와그네’ 프로그램이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토 론

한부모가정의 욕구를 반영한 지원방안 모색해야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들어가기

육아정책연구소의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으로 필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그동안 취약계층 대상 가정 중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탈북자가정 등은 정부의 우선지원정책에서 소외되다 보니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방안 연구는 늦었지만 시기 적절한 연구이며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의 제안 방안들은 각 가정의 어려움과 특성을 반영한 제안들이어서 이들 제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취약계층의 삶에 도움이 되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방안이 각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정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다보니 각 가정의 고충과 욕구를 명확히 규명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토론자는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방안에 공감하면서 아울러 지난 10년간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를 이끌어온 경험과 한부모가정의 실태를 반영한 한부모가정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지원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한부모가정의 실태와 고충

한부모가정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6%에 이르는 1,370천가구로 가구원수를 보면 3,500,000명에 이른다, 이중 한부모가정 아동은 2,130천명에 이른다.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연구(황은숙, 2006)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건강에 문제를 보이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무척 크다고 하겠다. 또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한부모가정을 어렵게 하여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한부모가정 지원 프로그램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2002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부모가정 전문지원단체로 설립된 이래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의 인권보호 및 증진,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제안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 중에는 한부모가정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돋는 프로그램과 한부모가정 인식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책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다.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에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자녀교육, 자조모임 등이 있다. 개인상담은 면담, 전화, 인터넷 상담을 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미술치료, 치료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부모교육은 혼인상태에 따라 이혼, 사별, 재혼가정에 따라 이혼가정 부모교육, 사별가정 부모교육, 재혼준비 교육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양육자에 따라 싱글맘가정 부모교육, 싱글대디학교 등 각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자녀교육의 경우는 자녀의 연령대 별로 아동을 대상으로한 자녀교육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되고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현실적응교육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자존감교육 프로그램, 학습클리닉 등 다양하다. 자조모임의 경우도 이혼가정, 사별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 나누어 제공되기도 한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는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캠페인과 평등한 가정문화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이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한

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없는 사고를 갖도록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한부모가정 정부정책을 안내해 자녀양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가정 전문가인 한부모가정지도사를 양성하고 있다.

3. 주제발표의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방안에서 고려될 점

주제발표 논문인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의 한부모가정 지원방안을 보면 유아 및 부모특성에서 가정 경제 책임부담, 낮 시간 부모 프로그램 참여어려움을 지적하고,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정서 순화 및 기초학습지도,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및 양육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특성은 가정 경제 책임부담과 낮 시간대 프로그램 참여 어려움 외에 심리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적인 편견 등 한부모가정의 4대 고충(황은숙, 2009)이 심각하다 하겠다.

한부모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하겠다. 주제발표자는 한부모가정의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정신건강 및 양육역할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부모가정의 부모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부, 별거 등으로 발생한다. 이는 각 가정의 한부모가정 발생유형에 따라 정신건강 및 자녀양육 지도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상태별 유형에 따른 가정별 고충과 욕구를 이해하거나 반영되지 못한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정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한부모가정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그 발생유형 또는 혼인상태에 따른 부모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혼가정과 사별가정, 미혼모부가정, 별거 가정 그리고 재혼전 가정 등으로 나누어 그 특성에 맞는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도 정신건강 및 양육역할 강화로 크게 설정하기보다는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혼가정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심리,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정체감회복하기, 분노에서 벗어나기 등), 현실극복 프로그램(이혼 다시 보기, 현실적응, 현실극복 등), 한부모가정 아동이해 프로

그램(이혼가정 자녀의 발달과정, 이혼가정 자녀지도 등), 한부모가정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한부모가정 자녀이해하기 등), 사회지원망 프로그램(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지원단체 현황 등), 재혼준비교육(자녀가 보는 부모의 재혼, 행복한 재혼가정 만들기 등) 등으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겠다(황은숙, 2005).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도 유아의 정서 순화 및 기초학습지도외에 달라진 가족체계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현실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한부모가정 반편 견교육, 한부모가정 사회성 발달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자존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한부모가정 현실적응교육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정 발생 후의 혼란스러운 정서를 안정시키고, 달라진 가족체계와 떠나간 부모에 대한 궁금증 등 이혼에 대한 개념화를 다루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황은숙, 2002, 2009)이라 하겠다.

4. 향후 한부모가정 지원방안

한부모가정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린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가정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겠다. 주제논문에서 제시한 제안외에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2003년부터 한부모가정지도사를 양성하여 1천여명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한부모가정은 다른 가정과는 달리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고, 욕구를 가진 가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자체 기관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10여개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1곳 설치되어 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전체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포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을 전국에 설치해야 하겠다.

셋째,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와는 달리 의료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월24천원의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이 전부이다.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한부모가정 발생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다보니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성이 높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들 중에는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겠다.

넷째, 아동양육비의 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5만원의 아동양육비(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월 10만원)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 되지 않는 평가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아동의 연령을 18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양육비도 월 2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하겠다.

나가기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지원방안의 내용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한부모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

참고문헌

- 황은숙(2002). 한부모가정 반편견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_____ (2005).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연구. 한부모가정연구. 제1권1호, 1-34.
- _____ (2009).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토 론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현황과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대한 제안

강복정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팀장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경과

법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방안」(‘06년 4월)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08년)에 의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전달체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수립 · 추진

’06. 4. 국정과제회의에서 법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 수립 · 추진
’08. 10.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공표

- 12개 관련부처가 총 7개 과제, 27개 소과제를 분담 시행,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총괄 수행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여성가족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팀)를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

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으로 위탁(2006. 3).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분리됨(2009. 1)

- 2008. 9.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의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됨.

2006년 21개소 → 2007년 38개소 → 2008년 80개소 → 2009년 100개소(19개 지방비센터 별도)
 → 2010년 159개소(12개 지방비센터 별도)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지원기구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 강화

– 지역사회 허브기능 및 프로그램 내실화

-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질 관리 및 평가 강화
- 이중언어교실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통·번역서비스
- 취창업교육 및 연계 강화
- 법무부 사회통합 이수제 관련 교육과정 지원

2.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녀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은 크게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중심, 방문교육사업 중심으로 나누며 실제 사업수행,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전문가 양성으로 나뉠 수 있다.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	장소	기간	기관수	2009 실적 (실인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 육아정보나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 사랑나누미, 자원봉사자, 종사자 등 배치 	자녀 부모	센터	수시	172개소	• 자녀 : 5,506명
이중언어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자녀대상 이중언어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이용 가정 전체가능 	자녀 부모	센터	연중	52개소	• '09년 5개소 시범사업 실시 (베트남어, 중국어)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	장소	기간	기관수	2009 실적 (실인원)
방문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한글교육 • 아동양육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역할교육 - 부모-자녀관계향상교육 - 학교 및 생활지도교육 - 영양과 건강지도교육 - 사전, 사후 척도 개발 • 임신·출산지도 	자녀 부모	개별 가정	5개월	159개소	• 년간 : 10,480가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발달 체크 및 상담, 발음(조음·음운) 체크 등 언어발달 진단 •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의사소통 및 사회성 증진 등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방법 제공, 교육참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자녀 부모	센터, 보육 시설	6개월 이상	98명 78개소 센터	언어평가: 3,213명 개별수업: 1,544명 모둠수업: 871명 부모상담: 3,160명 (6,424회)
프로그램 및 콘텐츠	내용					대상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양육신념과 스트레스 인식 • 자녀발달, 문제와 적응, 자신감 높이는 양육방식 • 놀이와 함께하기 					부모, 자녀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역할인식, 가족의 장점발견 • 좋은 아버지역할상 찾기, 대화방법 • 자녀의 욕구와 충족방법, 친밀감 향상, 마음표현하기 					아버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운영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실 운영방법 • 언어별 발음, 동요, 문화, 대화, 체험을 통한 교과구성 					자녀, 부모
다문화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인식개선 한국문화-러시아 문화 비교 콘텐츠 • 다문화인식개선 한국문화-캄보디아 문화 비교 콘텐츠 • ('07년- 베트남·필리핀·중국, '08년-몽골)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멘토링사업 운영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방법 • '다문화가족 멘티-멘토 프로그램'과 '멘토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다문화가족, 일반가족, 대학생 등
전문인력양성	내용					인원
다문화가족교육 전문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06~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통합, 부부, 배우자, 아버지, 부모-자녀관계향상 교육 • 강사인력풀 구축(다문화가족실적관리 시스템 등록) 					183명

전문인력양성	내용	인원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사회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08~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이해, 법률 및 인권, 한국생활적응, 결혼과 가족이해 • 인력풀 구축(다문화가족복지실적 시스템 등록) 	82명
아동양육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 법률, 정책이해 등 • 다문화가족 아동발달, 놀이, 학습, 독서, 성, 건강관리, 사례관리 	1,201명
언어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 법률, 정책이해 등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진단 이론 및 실습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이론 및 실습 	98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특성 평가도구

- 1)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
- 2)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발달 척도(PRES)
- 3) M-B-CDI-K 이해·표현 어휘발달 검사
- 4)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 5)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
- 6) 우리말 조음음운검사(U-TAP)

3.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대한 제안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사업은 주로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문화가족 자녀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분리형 서비스 보다는 자녀양육 및 아동발달에 있어 가족이 함께 조기개입 및 역할적용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1차적 다문화가족 육아지원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통합적 육아지원기관으로서 교육과정 구성, 교사교육, 콘텐츠 및 교구 확보, 지속적 부모교육과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제문의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개발 방향에 근거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 추진 다문화 관련 연구’인 ① 다문화가정 유아 지원 정책의 효율화 방안연구, ②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 연구, ③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유아교육 안내책자 번역·보급사업, ④ 다문화 가정 유아 및 부모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개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다문

화가족사업지원단의 “이중언어교실 운영매뉴얼 개발,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부모역 할 및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자녀생활지도 및 학교입학준비, 영양및건강지도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자조모임 매뉴얼 및 가족교육 매뉴얼 등과 연계하여 초급-적용-심화 단계의 체계화된 매뉴얼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한다.

둘째, 육아정책연구소 및 기타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범적용 및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기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공조체계가 원만히 형성되었으면 한다.

셋째, 지역의 관련 기관분포와 양육 및 교육환경 등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기관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는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별도로 사업을 적용하기에는 자녀수가 적거나 교사 및 시설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협력 모델개발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은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양육·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출신국 언어별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와 같이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여 자녀의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놓인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정-보육 및 육아지원기관-방문교육서비스- 인식개선 등등 중장기 계획 하에 기초-보수-심화 단계별 콘텐츠 및 직접서비스 실시, 성과분석 → 개선방안 마련... 등의 과정들의 범정부적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다문화가족지원 기관 등을 아울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포럼은 첫 출발이며, 향후 후속적인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여섯째,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는 성인(교사, 지도사, 나아가 주민)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곱째,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가정 및 사회적응에 있어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응해가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불어 외국인 부모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하는데도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이중언어환경구축과 다문화인식수준이 높아진다면 불필요한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글로벌 세계화를 한 층 끌어올릴 것이다.



토 론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영유아 지원 모형 개발을 위한 토론원고

김선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정착지원센터 부장

2001년도부터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시작한지 올해로 10년째이다. 현재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은 16,413명(2010년 3월 기준: 통일부 내부자료)이며 전국에 2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시도군구)가 19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를 중 북한이탈청소년(만 6~20세)의 수는 1,478명이며, 초·중·고 재학생은 1,143명으로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곧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본연구의 주요한 대상 집단인 영유아들의 현황은 2009년 4월 기준 611명으로 전체 16,009명 중 4%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발표자료).

2000년도 초반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이 성인이었고, 일부 무연고 청소년과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가족동반의 경우였다. 따라서 정착지원의 주요 대상은 성인이었으며 정착지원의 내용도 기초생계를 포함한 일반적인 초기 정착지원의 내용이었다. 이후, 무연고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및 사회적응에서의 어려움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사회적응, 그리고 신체발달을 위한 지원들이 고려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의 총괄 부서인 통일부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한국교육개발원내에 설치하여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지원과 학교적응 지원, 학부모 지원, 학교교사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듯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유형별 특성들이 다양화 되고 또한, 정착 시기별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착의 주요한 이슈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정착

지원의 내용과 방법들이 새로워질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도에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과거 탈북한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보호 혜택이 없었지만, 법률 개정 이후 해외체류 10년 이상인자로 국내 입국시 동일하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착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대개 중국 등지에서 10년 이상 체류자인 북한이탈 여성들이 최근 남한에 입국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들과 동시에 중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이 동반입국하거나, 이후 입국하여 영유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어 밖에 모르는 유아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정책 연구소의 취약계층 영유아들의 통합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의 발표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과 지원은 성인 중심의 자활자립 및 정착지원 전반을 다루는 부분이 많았고, 여성입국자수가 '02년을 기점으로 남성입국자수를 초월하기 시작하여 최근 4년 동안은 2006년 1,509명(75%), 2007년 1,974명(78%), 2008년 2,197명(78%), 2009년 7월 현재 1,283명(76%), 누적인원으로 11,233명(67%)으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발표자료). 이렇게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정착지원의 특이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정착지원의 내용이 미비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9세는 4,435명(28%), 30-39세는 5,286(33%)를 20대-30대는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2009년 4월 기준: 통일부 발표자료). 동시에 여성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한 가정형성과 자녀양육과 교육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 연구(2008)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인 조사대상자 361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179명(49.6%), 비경제활동인구는 182명(50.4%)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 49.6%로 나타났다. 이들 중 비경제 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몸이 불편해서(35.2%)’, ‘육아(19.8%)’, ‘통학(19.2%)’,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취업이 어려움(6%)’, ‘일거리를 찾아보았으나 없어서(0.5%)’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 활동 방해 요인으로 신체건강에 이어서 육아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처럼 육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부재는 곧 북한이탈주민 자활자립의 장애물로도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번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및 개별 교육내용을 시

범 적용해 본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며,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과제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서울 북부 하나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주요사업(영유아 및 부모 지원 포함)

구분	주요내용
1. 초기전입자 정착지원사업	<p>1) 정착도우미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병인수, 초기전입과정 지원(월1회 하나원 방문) • 정착도우미(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신규 세대 연결 및 관리 <p>2) 지역적응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노원, 강북, 도봉, 중랑, 성북, 동대문구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 • 내용 : 3주(70시간) 교육 /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교육, 개인역량강화 교육 등
2. 사례관리사업	<p>1) 사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 강북, 도봉, 중랑, 성북, 동대문구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1년 사후관리) - 신규 전입자 외 기준 거주 요보호대상자 관리 • 내용 :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각종 서비스 제공 <p>2) 의료서비스 :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연계 무료 진료, 검진</p> <p>3) 경제적 지원 : 장학금 / 밀반찬 · 김치 및 생필품지원</p> <p>4) 명절지원 : 설(떡국떡) / 추석(선물-생필품 또는 식품) 지원</p>
3. 정신건강 지원사업 (상담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심리불안정 및 PTSD 대상자 및 전입초기 정서안정이 필요한 대상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심리사가 상주 대상자 상담 및 가정방문상담 - 정신건강관련 교육 및 심리치료 - 요보호 case에 대한 약물관리 및 정신과 진료
4. 취업지원사업	<p>1) 취업상담(전담사회복지사 지정) : 직업흥미검사 실시, 취업교육 실시 등</p> <p>2) 취업알선 : 구인 및 구직처 발굴 및 연계(취업이후 사후관리)</p> <p>3) 취업지원네트워크 - 직업훈련기관 및 취업처(상공회의의소 및 전문기관) 연계</p> <p>4) 정보화 교육(기초반 & 자격증반) : 주5회 컴퓨터 교육</p>
5. 아동, 청소년, 대학생 교육사업	<p>1) 탈북아동 방과후공부방 “무지개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및 운영시간 : 노원구 거주 탈북 아동(초등학교 1~6학년) 주5회 운영 • 교육내용 :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및 영어지도(전문강사), 사회적응pg <p>2) 청소년 학습지도 “학습멘토링 프로그램”</p>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대학생 멘토와 학습지원 희망 탈북청소년을 1:1로 연결, 학습지원 <p>3) 대학진학 & 적응지원p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예정자 진로상담 및 원서작성지도, 진학가이드 제공(해당시즌수시) - 예비대학모임 “새내기 대학가다”pg(년1회) / 대학입시박람회(년1회) - 대학적응지원 : 캠퍼스 멘토링pg 및 동아리 지원(외대, 서강대) <p>4) 학부모 교육 & 간담회 & 학부모 상담(개별 또는 집단)</p>
6. 사회적응 지원사업	<p>1) 노원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단합을 위한 전체 대상의 정기적 행사 : 체육대회(10월) / 대학생여름캠프(7월) / 송년가족모임(12월)</p>
7. 지역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사업	<p>1) 전문자원봉사단 활동 확대</p> <p>2) 노원지역 새터민 지원 영역별(교육, 의료, 취업,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p> <p>3) 보호담당관 간담회</p>
8. 지역주민 통합사업	<p>1) 북한이탈주민조직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나눔봉사단’, 주민통합기획단 ‘좋은이웃’ 활동 <p>2) 지역인식개선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축제 ‘북한음식나누기’, 대학생 및 지역교회 인식개선사업

2. 하나센터의 역할에 기반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고려사항

1) 하나센터 내에 영유아교육지원 사업 실시 가능성 탐색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 15,000명 시대 진입과 연간 3,000여명 입국추세 전망에 따라서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역량 체계화의 필요성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하나원 이후의 거주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필요성 지속 제기되어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9.1.31)이 진행되면서 개정된 정착지원법 제15조 제2항에 ‘거주지 적응교육’ 조항 신설(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적응교육)에 따라 2009년 시범 하나센터 6개소 운영을 시작하여 2010년 5월 현재 전국에 30개소의 하나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통일부 보도자료, 2009).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가 전국화 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원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연속된 정착지원서비스 수혜가 가능해졌으

며, 통일부는 중앙에서 지자체로 이어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나센터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화된 One-Stop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지역사회내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연계하면서 지역사회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협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 서비스로는 하나원 수료 이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초기적응교육을 3주간 실시 하며 이후, 1년간 거주지 편입절차(동사무소 편입 및 임대아파트 계약 등)부터 취업알선 및 직장 적응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며, 기존 지역사회 거주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거주지 내에서 정착지원을 총괄하게 된다(김선희, 2009).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센터’는 센터가 포괄하는 지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기간인 1년 동안 적응교육과 사후지원(사례관리)을 담당하며, 기존 거주자들에 대한 포괄적 정착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하며, 가족내 다양한 환경(가족관계, 양육환경, 경제적인 상황 등)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하나센터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영육아 교육지원 사업 실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에서도 다뤄졌듯이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영육아 가정의 학부모용, 영유아용 교육 매뉴얼이 보급과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 및 광역시와 수도권의 경우, 고밀집 지역이므로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사회 내 영유아들 가정이 상당수에 이르므로 이러한 지역에는 ‘영유아교육 전담자’를 파견·배치할 것이 요구되어 진다.

현재, 하나센터 내 종사자는 통일부 지원으로는 3명 - 4명 정도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체 예산 및 외부 지원 예산에 의해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하나센터에 부여된 성인중심 및 가족중심의 포괄적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상당히 분주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담 인력의 배치와 적절한 교육을 위한 매뉴얼 보급 및 교육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센터를 통해서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적절한 교육과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센터 내에서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유아 희망교육사’ 육성 및 배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희망교육사’를 북한이탈주민 영유아들의 가정에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부처간의 연계 뿐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관련 분야의 인프라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나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하나센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허브 역할’임을 감안할 때 영유아의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가정에도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희망교육사’를 파견함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활용한 전담자 육성 및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는 남한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교육이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탁아소 종사자 및 교원출신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유아 희망 교육사’로 활동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정부가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능동적 복지’를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담인력을 육성하되, 당사자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북 간의 60여년의 분단의 결과 다양한 영역에서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의 문제를 넘어선 기본적인 가치관과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에서 남북한의 상이함이 많기 때문에 남한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잘 훈련되어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를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일정 기간동안 남한에 정착하고, 남한에서 관련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관련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남한의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절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실제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시범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다. 다만, 이러한 시범 운영과정에서 현재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거점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센터’를 통하여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전달과정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영유아기 자녀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의 중요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사회적응상의 문제로 대두되는 원인은 정신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과 문화적응상의 스트레스(accellurative stress)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¹⁾ 첫째, 북한에서의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반인권적인 상황을 경험하였으며, 둘째, 탈북과정과 탈북이후 중국에서의 생활 및 북한 송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한 인권침해 상황과 남한 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으며, 셋째는 새로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경험 곧 문화적응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들²⁾이 심리적인 위축과 불안 및 우울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을 연구에 따르면(조영아, 2004)³⁾, 전체적인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3년 후 대상자의 55%에서 우울성향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문제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과정이론의 적용연구에 따르면(김연희, 2005), 남한 정착기간 중에 받는 스트레스는 4점 중 평균 2.6점이었으며, 북에 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3.59점), 가족을 데려와야 한다는 부담감(3.38점), 취업의 어려움(3.22점), 남한 사람들의 편견(2.99점)으로 정신적 외상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거의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알코올 의존에 대한 조사(김연희, 2005) 55.2%의 남성과 27.6%의 여성이 알코올 의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적인 특성은 자녀 양육 및 가정내의 다양한 기능수행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에서는 다뤄 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체감하는 수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수준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에 더욱 심

1) 아름다운생명(2006), “새터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가이드북”, 31p.

2) 상실, 사회적 소외, 신분의 불연속, 문화충격, 근대화 정도의 차이, 소수 신분 등으로 발생되는 스트레스.

3) 2001년 입국자 200명 3년 추적 연구(대상: 남성, 40-50대, 건강상태, 재북시와 남한에서의 심리적 외상, 재북 결혼 경험, 북한에서 대졸자).

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하나센터 운영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탈북아동들을 위한 전담 공부방에서 학부모들이 아동들의 양육과 관련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우 어느 취약계층 집단보다도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영유아기 자녀양육을 위한 역량강화의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양육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기본적인 적응 스트레스를 일정 부분 다뤄야 할 것이며, 그 이후 자녀양육방법 및 가족기능과 관련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지원 모형에 대한 추가의견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정 및 방향에 대한 제언)

1) 연구결과의 적용과 시행을 위한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의 체계

구축 필요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가족지원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정착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포괄적인 지원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유관 부처들이 가진 좋은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구체화하여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정착지원 기관에 구체적으로 보급되고 실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많은 정책의 문제점이 부처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으며, 또한 해결책이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들을 감안할 때 많은 연구들의 결과가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 간의 적극적인 논의구조와 협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취약계층 특히,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문화적 특수성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및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필요

취약계층 중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주양육 엄마의 문화적 특수성이 양육

과정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 가정들의 영유아 양육실태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이후 후속 연구로서 주양자들의 문화적 특수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녀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그러한 특이성의 한국의 기본적인 영육아 교육(보육)체계 및 내용과 상이한 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주양육자의 문화적 특수성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 정신건강상의 특징 등이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수준과 스트레스 감당 능력에도 경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후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에 근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선희(200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지원 모형의 개발』 워크샵 자료집.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생명.
- 김선희(2009). “하나센터와 지역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 『민·관 협력을 통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 방안: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관 합동워크숍 자료집』, 북한이탈 주민지원 민간단체 연대.
- 김창오 외(200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가이드북』. 아름다운생명.
- 윤여상 외(2005).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연구』. 북한인권정보센터.
- 조영아(2004). 「탈북여성들의 남한적응 특징과 대책」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가 심포지움.
- 조영아·전우택·유정자·엄진섭(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통일부 자료.



토 론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방안」 토론문

전우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장

1. 취약계층 가정의 육아실태 및 지원 필요성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실직, 저소득 등에 따른 취약계층 외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우리 사회에 정착·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경제·사회적 기반이 약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가정은 대체로 저소득, 가족관계의 해체, 자녀 양육 관련 정보나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당 가정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작업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교과부에서 취약계층 가정의 유아 등을 위한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2. 교과부의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지원(교과부)

1)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한 지원

- 교과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취원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4인가족 436만원) 이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아 학비를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의 유치원 접근성을 보다 높여 생애 초기에 충분한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 분	국 · 공립	사 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5만7천원	17만2천원
만3 · 4세아 차등교육비 (소득하위 50%, 60%, 70% 이하: 100%, 60%, 30% 차등지원)	5만7천원	3세 19만1천원 · 4세 17만2천원 (전액기준)
두자녀 이상 교육비	만 3~4세인 모든 둘째아 이상,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맞벌이 가구 지원	소득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산정	
종일반비 지원	3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 실제 부담 비용 지원	5만원 범위 내

- 또한, 교과부에서는 교육 · 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03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10년 현재, 100 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10년 지원예산 총 726.5억원).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 · 정서 발달,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망을 공고히 하고 있다.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체험 및 심리 · 정서 프로그램, 캠프, 도서관 활동,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한 보건 · 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2)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 자녀 교육 관련 정보 및 준비 부족, 교육 경험 · 기회의 적기 제공 미흡 등이 있는 경우, 유아의 영역별 성장 · 발달이 지연되거나, 학습결손 누적으로 인한 성취 부진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 이에, 교과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 등 적절한 시기에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등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년에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첫째, 정보 부족으로 유아 교육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해 유아

교육 관련 안내자료(8개국어 번역 예정)를 보급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희망유아교육사¹⁾를 확대('09년 172명→'10년 300명)하여 미이용 유아에 대한 발달 수준 진단 및 수준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가 공립 유치원 취원 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 등에 권고해 나갈 것이다.

-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수준에 맞는 지원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 후, 기초역량·정서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할 것이다. 특히, 지역 단위 사립 유치원 협력체제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유아가 많은 지역 및 유치원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셋째, 유치원 원장·원감,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 연수, 교사용 매뉴얼 개발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교사 및 학부모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 인식 개선을 위해 대졸 이상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 집중 교육을 통해 이들이 유치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10년 40명 양성).

3)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교육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고통, 학습결손, 남한 적응과정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경제·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교과부는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의 적응 및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입국 초기 하나원에 머무는 3개월간 탈북 자녀는 삼죽초등학교(경기도 안성 소재)의 특별학급 및 병설 유치원에서 초기 적응교육을 받는데,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 탈북 자녀 특성에 맞는 별도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초기 적응교육 후 정착지 학교에 전·편입 학하며, 빠른 적응을 위해 1:1 멘토링 및 보충교육 등을 지원받고 있다.
- 탈북 자녀는, 남북한간 용어의 차이, 말투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학습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용어 설명집 개발·보급, 학교 등에서의 집중적인 국어 교육, 사회·수학 교과 등에 대한 보충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별 역량을 높여

1)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가 가정,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유아, 발달 지연 유아 등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고 있다.

-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일반학생의 탈북주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 대상 수준별 연수를 지원하고, 탈북 학생, 일반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 이해교육 자료 개발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자녀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학부모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지원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상황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학교, 교육청 단위의 교육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과부는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센터²⁾(한국교육개발원)를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앞으로도 탈북 가정의 유아 등이 적기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유치원 취원을 적극 유도하고,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제언

- 취약계층 가정의 특성이 점차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들 가정이 겪게 되는 기본적인 어려움에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활동이나 가족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주 양육자가 부재한 점, 양육 또는 교육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이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운 점, 그로 인해 영유아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적 경험과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생애초기 교육 경험, 또래 및 교사 등과의 상호작용,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및 정서 형성 등일 것이다. 따라서,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의 보호자들에 대한 양육·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녀들이 적기에 교육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2) 탈북 청소년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상담을 지원하는 홈페이지(www.hub4u.or.kr)와 콜센터(3462-0111)를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각 취약계층 가정이 특수하게 직면하게 되는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 단계는 적 기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또래간 상호작용과 놀이 및 학습 활동을 통해 적응과 성장이 가능한 시기이므로, 유아에 대한 지원은 통합교육을 지향하되, 이들을 지원하는 교사나 관련 인적자원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 발표문에서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1) 대상 측면(영유아, 부모, 교사, 지역) 2) 지원 부처 및 기관 측면(전달체계, 전문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한 점은 촘촘한 지원과 관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관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를 수행하는 부처간 협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 특히 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협의체 등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에 활용 가능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연계한다면, 현장에서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의 예를 든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할 경우, 데리고 오는 자녀에 대한 교육은 희망유아교육사 등과 연계하여 활동한다면, 엄마·자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프라 등을 공동 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지역 단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모델, 개별 전달체계 및 자원 등이 연결될 수 있는 사례 등을 제시한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본다. 교과부의 예를 들면, 지역 내 유치원간 프로그램, 관련 인적·물적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단위 공·사립 유치원 협력체제(Together Network)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보재 개발, 통학버스 공동 활용, 영양사 공동 활용, 식자재 공동 구매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인데, 지역·현장에서의 사례 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모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동 연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면,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로 자녀를 보육 시설 또는 유치원의 이용실태(이용률, 미이용시 사유 등)에 대한 자료가 보다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토 론

드림스타트 사업 방향과 취약계층 가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전연진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장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에 대하여 취약계층 유형별로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이때, 육아정책연구소가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 실태와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심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토론은 요청받은 사항에 맞추어 먼저 오늘 주제발표 자료에도 제시된 0~만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2010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다룬 후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이 이뤄지는 모형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201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방향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비스를 지원받은 저소득 가구 아동이 열악한 양육환경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실시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를 지원받은 아동은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협동·책임감·자기통제 등 사회성이 높으며, 우울·불안·비행 등 문제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취약계층 가구의 가족기능이 회복되고 부모-자녀간 유대관계가 개선되는 등 아동의 양육환경도 변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상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10년 드림스타트 사업은 그간 표방해 왔던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맞춤·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의 본질적 취지를 보다 더 내실 있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통해 살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09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제도 중심으로 '1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을 '201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와 드림스타트 실무자 대상 '10년도 상반기 전문화 교육 시 보건복지부가 강의한 '201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방향과 과제'를 기반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 드림스타트센터 아동 발굴, 서비스 연계 중심축(hub) 역할,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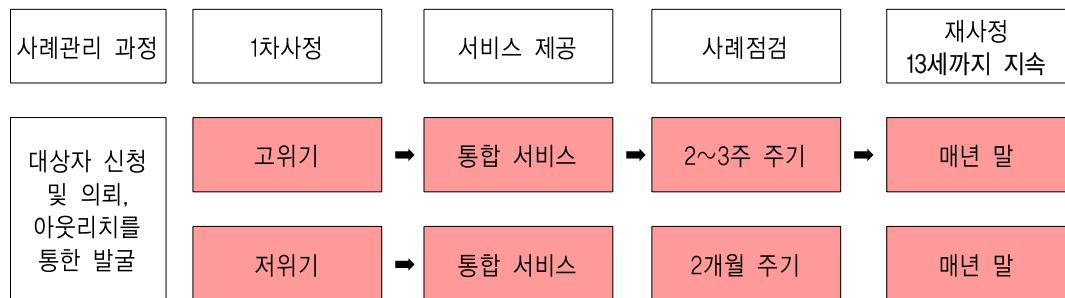
드림스타트센터의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 서비스 연계 허브 역할을 하고, 유기조사, 위기도 검사를 통한 사례판정 및 연계서비스 기획·조정, 사례점검, 재사정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센터가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은 그들의 발달 수준 및 특성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10년도에는 통합사례관리를 필수서비스로 지정하여, 드림스타트센터의 주요 기능 및 서비스가 모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임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명료화함으로써 그간 혼란을 야기해 왔던 사례관리가 주요 기능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사업과의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 위기스크리닝 척도 개발 및 시행을 통한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특성화 추진

기존에 몇몇 아동복지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아동의 특성 및 발달 상황이 일반 복지 시설의 서비스만으로는 어려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했다. 이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포괄하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도 보다 더 시급하게 개입이 필요한 고, 중위기 아동을 사업의 대상 아동으로 하였다. 특성화된 대상을 선별하고자 새롭게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고, 사례관리 및 사례점검 주기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고위기 아동은 2~3주 주기, 저위기 아동은 2개월 주기로 사례 점검이 이뤄진 반면, 신규사업지역에서는 사례점검 주기가 고위기 1개월, 저위기 3개월에 한번씩 이뤄진 후 각각 3개월, 6개월에 재사정이 이뤄지게 된

다. 이 제도는 우선 '10년도 신규 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1년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11년부터는 전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사업지역 위기도별 사례관리 과정】



【신규사업지역 위기도별 사례관리 과정】



○ 제공 서비스 체계 분류 신설 등 서비스 표준화

지금까지 드림스타트센터가 아동에게 맞춤·통합형 서비스를 잘 제공해 왔으나, 센터의 지역자원의 여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10년도에는 서비스 분류 체계(기본, 필수, 선택)를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① 기본서비스 : 드림스타트 사업 고유기능인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로, 드림스타트센터의 모든 아동에게 반드시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임.
- ② 필수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초 서비스로,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산전산후관리, 기초학습지원, 사회정서지원, 부모교육 등 총 6개 항목임. 각 센터는 아동 1인당 각 영역별로 1개 프로그램 이상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함.
- ③ 선택서비스 : 아동의 필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필수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로, 건강관리, 치료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임.

○ 지역유형별 운영 방식 차등화

지역유형에 따라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09년에는 지역유형별사업 운영 기준이 없어 센터의 표준 운영 방법을 모든 센터에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10년도에는 지역유형을 4개로 구분하고(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농산어촌), 이에 따라 지역유형별로 필수서비스 직접제공 비율, 수퍼비전 운영회수 차등화, 인력역할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구분		지역유형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
서비스	기본	내용	통합사례관리, 가정방문			
		제공방법	100% 직접 제공			
	필수	내용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산전산후관리, 기초학습, 사회정서, 부모교육			
		제공방법	직접방식 15%까지 제공 가능	직접방식 20%까지 제공 가능	직접방식 30%까지 제공 가능	직접방식 40%까지 제공 가능
선택	내용	건강관리, 치료지원, 학습지원, 양육지원, 문화체험 등				
	제공방법	100% 연계 또는 혼합 방식 제공				

구분		지역유형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
인력 역할	팀장	서비스 조력자 (지역자원 현황 파악, 개발 발굴)	서비스 조직자 (분산된 활용가능한 자원 조직화)	프로그램 촉진자 (프로그램별 운영방법 및 연계자원 결정)	프로그램 개발자 (대상아동과 자원을 탐색하여 서비스 개발)	
	팀원	프로그램 중재자 (사례관리 중심)		프로그램 중개자 (연계 및 직접운영 중 가능한 방법 판단 및 수행)	프로그램 실행자 (사례관리 및 직접수행)	
운영위원회	부구청장 위원장으로 구별 운영	부시장 위원장으로 시별 운영	부시장 위원장으로 시별 운영	부군수 위원장으로 군별 운영		
수퍼비전 체계	전문기관, 대학교 등 풍부한 지역자원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력풀 형성, 2월에 1회 운영	지역에 근거한 다양한 인력풀 구성, 2월에 1회 운영	인근 대도시 자치구형 및 대도시 기초단체형에 소재한 센터와 협력을 맺어 수퍼바이저 공유, 관련학회를 활용하여 전문가 추천받아 구성, 분기별 1회 운영	수퍼바이저 강사비 지급시 교통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 직접서비스 운영 관련 사례 수퍼비전 강화 필요, 분기별 1회 운영		
지역자원 연계	①전문적 수준의 영리 민간자원 개발 ②인접한 대도시 자치구 지역의 자원으로 발굴 확대 ③지역자원이 부족한 중소도시 기초단체 및 농산어촌 센터와 보유자원 공유	①시단위의 연계 자원이 가장 많으므로 발굴 및 조직화 노력 ②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독창적 자원 개발 독려	①도시형/농산어촌형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보다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자원 개발 ②지역사회에 근거한 자발적 봉사 단체 등 지역특성화 자원 활용	①풀뿌리식 토착 자원 활용 ②아동청소년 이외 분야에서 다양한 자원 개발 ③대도시 자치구형, 대도시 기초단체에 소재한 센터와 협력 맺어 자원 공동활용		

○ 사업지역 확대

드림스타트 사업은 '10년도부터 빈곤밀집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지역을 점진적으로 해당 시군구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대상 지역을 거점지역과 사업지역으로 나누고, 센터를 설치하는 거점지역은 빈곤아동 100명 이상 거주하고, 유사사업(교

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과 위스타트사업)의 실시지역을 가급적 배제하는 한편, 사업지역은 빈곤아동 3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드림스타트센터는 2010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신규지역을 선정하는 기준도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다.

2.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 지원 방안 및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논의

발표자께서는 주제발표에서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현황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각 가정유형별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제시해 주신 다섯가지의 취약계층 가정 지원 방향과 가정유형별 지원방안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제시해 주신 지원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토론자도 미력하나 몇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를 한 후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모형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를 위해 종합 복지 서비스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을 위해 정부 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 내에서 자료의 활용 및 전문인력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안에 전적인 동의를 표한다. 실제로 영유아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가정 유형과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핵심은 발표자가 제안하셨듯 개발된 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할 대상에게 실시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본 토론자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추가적 역할과 노력을 부탁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것이 개발되었는지를 알고,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의사결정과 함께 실무자 교육 및 책자 보급 등에 따른 예산 마련 등 실무적인 절차를 계획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교육 실시 등 실제적인 절차를 계획할 수 있도록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맞춰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를 위한 사업을 하는 주관 부처, 센터,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당해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안내하는 이메일 발송 또는 설명회 개최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 개발

된 프로그램은 주 대상이 누구이며, 어느 전달체계를 거쳐 어떠한 장면에서 활용하면 효과적인지를 알려줌으로써 프로그램을 활용할 실무자들이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정신건강과 영유아기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도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하는 저소득층 가정 부모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유형은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부모교육이나 자녀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부모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는 취약계층 대상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는 유형이나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그 어떤 곳에서도 서비스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는 더욱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접근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책자나 리플렛 형태로 요약하여 본 프로그램으로 진입하기 전에 서비스 대상자와의 접촉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획, 하나의 패키지화하여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제안해 주신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어느 대상이든 대상중심적 정책은 정부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연계협력하여 해당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 제기되어왔던 부분이다. 그러나 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번에 제안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은 그간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취약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모형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통합적 지원에 대한 의미가 명료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및 방법도 보다 더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이란?

- ▶ 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내에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둘째, 영유아에게는 바람직한 교육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셋째, 부모에게는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넷째, 교사 및 전문인력에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하고,
다섯째, 지역 내 영유아 대상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 통합적인 육아지원 모형임.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개념을 ‘통합’이라는 의미를 통해 살펴보면, 각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 등 인프라적 통합의 개념과 영유아 및 부모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의미에서의 통합 개념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문점은 위에 언급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에서 제공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교육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이다. 앞에서 발표자께서는 취약계층 가정별로 특화된 접근과 지원방안,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모형 적용에서는 다양하게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이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통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지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또한 인프라적 통합에 대한 접근에서도 각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세분화된 역할을 정의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역할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서 ‘통합’이 의미하는 개념을 정의해 주심과 함께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서도 사업간 연계 모형 부분을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로 별도 제시하고 각각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유관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단순 오류로 보이나, 53페이지의 <표 5-3-1>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살펴보면 전문인력에 보육교사가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드림스타

트 사업의 전문인력은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전문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각 사업 별 세세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역할을 명시한다면 지역에서 작동하는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3. 나가며

육아정책연구소는 3개년 연구로 수행하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 중 1차년도 연구 추진 중 많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 발표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표자가 제안하신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 모형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본 토론자 역시 관련된 분야의 업무 담당자로서 협력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본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